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2년 겨울(Vol. 9 No. 4) |

목 차

제1부 국내·외 재정성과평가 동향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05
-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07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0
- 성과부진 사업의 투자규모 감축,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등 20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12

2. 미국

- 분기별 PMA 및 기관별 우선순위목표 업데이트 15
- 범정부적 PMA 최종본 발표 18
- 보조금 관리: 내무부의 일부 경쟁보조금 사업 지급 절차 개선방안 20

3. 영국

- 공공부문 사기 당국 명령서 24

4. 아일랜드

- 2022년 지출검토 보고서 28
- 2022년 하계경제담화 31

5. 캐나다

- 2022-24 국가행동계획 발표 34
- 2020-2021 공공서비스 목록 36

6. 프랑스

-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의 업데이트 37

7. 네덜란드

- 데이터 분석 과정 온라인 강좌 개설 39

» II.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43

2. 국외 연구 동향

- 미국 연방 기관에 대한 정책 철회: 미국 연방 보조금 삭감의 요인 48
- 협력 및 성과에 대한 메타 분석: 협력 성과 부문별 차이에 대한 시험 조정 52

» III.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59
-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61

2. 국외 연구 동향

- 장기조달계약(MULTI YEAR PROCUREMENT): 예산 의사결정에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제시 63
- 랜독스 연구소와 정부 계약에 관한 조사 73

제2부 주요국의 재정성과정보 DB 현황

- 1. 미국 85
- 2. 캐나다 96



국내·외 재정성과평가 동향



제1부

-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 II.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 III. 국가계약 동향

FOCUS

■ 2022년 4분기 국내외 각국에서 발생한 재정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관련 주요 동향은 다음과 같음

- 국내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
 - 첫째, 성과목표관리 체제를 개편하여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차년도부터 부처별 대표지표를 선정하여 그래픽을 통해 공개하기로 함
 - 둘째, 사업성과평가 체제를 개편함. 즉 부처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하기로 하고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기로 함
 - 셋째,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5년간 전 주기를 중점으로 성과관리하기로 함
 - 넷째,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정보를 구축하고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기로 함
- 아울러 성과부진 사업의 투자규모 감축 및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등에 관한 20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음
- 해외에서는 커다란 제도적 변화 없이 기존 성과관리 체제의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는 수준의 동향 변화가 이루어졌음
 - 첫째, 미국에서는 2021년 발표된 바이든-해리슨 정부의 대통령관리의제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최종본이 확정·발표되었음
 - 둘째, 아일랜드에서는 스포츠, 국가자산관리, 보건 등의 분야에 걸친 총 7개의 지출검토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 셋째, 캐나다에서는 성과정보 데이터포털인 GC INFOBASE를 통해 2020~2021년도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개하였음
 - 넷째, 프랑스에서는 2021년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담은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이 업데이트되었음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CONTENTS

1. 한국
2. 미국
3. 영국
4. 아일랜드
5. 캐나다
6. 프랑스
7. 네덜란드

I. 국가별 재정성과관리 동향

1. 한국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 2022. 7. 11.,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획재정부는 핵심과제 ①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②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③ 규제혁신, ④ 재정혁신, ⑤ 예산편성 방향, ⑥ 공공기관 혁신, ⑦ 세계개편 방향 등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¹⁾
- 재정혁신 부문은 현재 건전재정기조 확립하에 4대 재정부용방향을 설정하고, 민간 역동성 회복 지원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에 재정전략회의의 결과를 이행하고, 성과관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개선의 병행을 통한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5개 이내) 설정 및 공개,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 프로젝트 관리, 성과기반 지출 구조조정 강화를 제시함
 - * 5개년 단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세부내용 반영(7월)

1)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중 재정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혁신 부문을 요약·정리하였음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실시」, 2022. 7. 11.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 「'22~'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국무회의의 보고 –
– 2022. 8. 22.,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제38회 국무회의에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2~'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최초로 수립되었음
 - 향후 5년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본계획」을 기초로 단년도 세부 운영계획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1. 추진 배경

- 정부는 급격히 악화된 재정건전성의 회복을 재정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거시적 측면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총량 관리와 더불어 미시적 차원에서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가 필요함
- 200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 후, 근 20년간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제도운영, 예산환류 미흡, 평가중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성과목표관리²⁾의 경우,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 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임

2) 성과목표관리는 부처 단위의 재정운용 성과 측정을 위해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성과계획서', 결산 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함

- 사업성과평가³⁾의 경우, 6개 부처가 11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중복 등과 같은 피평가부담은 과중한 반면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하여 예산편성 시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성과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기존 성과관리 제도는 부처 단위, 단년도 관리로 범정부적 우선순위가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의 꾸준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임

2.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3가지 기본방향하에 재정성과관리 제도를 개편할 계획임
 - (효율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처의 성과관리 부문 행정부담 경감
 - (책임성)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편성 환류의 제도화 실시
 - (투명성) 재정운용 성과정보의 대국민 공개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 성과목표관리 개편 추진
 -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⁴⁾로 대폭 축소
 -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한 후, 목표달성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픽으로 공개
 - 매년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 검토⁵⁾
- 사업성과평가 개편 추진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 시행
 - 중장기적으로 존치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고, 평가제도 신설 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함
 - 평가결과가 성과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⁶⁾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로 관리함⁷⁾

3) 사업성과평가는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서 11개의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 중임

4) 1,000여개에서 500개 이하로 축소

5) 기존에는 결산 시 각 부처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형식적으로 공개하였으나, 기존의 방식에서 기재부가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 예정

6) 예시: 성과미흡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일정비율 의무 삭감 등

7) 2년 연속 미흡 시 사업재설계 및 컨설팅 실시, 3년 연속 미흡 시 원칙적 사업폐지

■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이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을 선별하여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5년간 전(全) 주기(편성-집행-평가) 중점으로 성과관리를 진행함
- 각 핵심 재정사업군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함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 사업별 성과정보DB 구축 및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
-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 운영
-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4. 향후 계획

■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마련 및 국무회의 보고(12월)

-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은 금년 말까지 확정하여 2023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방향 확정」, 2022. 8. 22.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2. 8. 30., 기획재정부 –

■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의결에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크게 I.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과 II.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함

■ I.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은 예산안의 전체 모습, 재정혁신, 투자중점 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정혁신 부문에서 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⁸⁾

I.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1. 재정혁신

- 교부금 개편, 성과평가 강화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함
 -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함
 - 교육교부금 일부를 활용하여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
 - 성과평가의 경우, 성과미흡 사업예산 일정비율 삭감 원칙 도입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제도화 하고, 각 부처의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 달성도를 국민들께 공개하여 부처 성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8) 상기 내용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재정성과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II.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1. 2022~2026년 재정운용 방향

-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기조 뒷받침
 -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등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공공기관 자산 정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재정성과 제고 및 재정여력을 지속 보강할 예정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2. 8. 30.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성과부진 사업의 투자규모 감축, 유사사업 간 중복 해소 등 20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 2022. 9. 23.,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평가대상사업의 제도개선 내용, 2023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된 핵심사업 평가결과를 포함한 「20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안 반영현황 및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 2022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2023년 예산안 현황

① 탄소중립 이행	② 디지털 전환	③ 인구변화 대응
· 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1.9 → (’23) 2.4조원	·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22) 3,248 → (’23) 4,163억원	·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 (’22) 159 → (’23) -
· 수소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22) 8,928 → (’23) 8,383억원	· SW융합인력양성 (’22) 1,983 → (’23) 2,053억원	· 도시재생 (’22) 1.6 → (’23) 1.5조원
·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22) 2,688 → (’23) 2,066억원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2) 5,797 → (’23) 2,805억원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 2,245 → (’23) 1,911억원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2) 1,267억원 → (’23) -	

1. 주요 개편내용

-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규모 및 투자방식 재검토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⁹⁾)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품질검증 미비 등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수요 저하
 - 수요가 큰 기반기술 위주로 우선 구축하되 2023년 구축물량을 감축하고, 고품질 데이터

9) (2022년) 5,797억원/310종 구축 → (2023안) 2,805억원/150종, △51.6%

구축을 위한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 (도시재생¹⁰) 연간 약 100곳의 신규사업지 선정 등 과도한 투자로 집행 부진
 - 투자여건이 성숙한 현장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등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지역의 재정 책임 강화, 리츠 등 민간참여 확대 추진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¹¹)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발생
 - 2023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한국전력-민간 사업자 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추진방식 개편 추진

■ (유사중복 해소)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인력양성 분야는 부처 간 역할 체계화를 통해 유사중복 등과 같은 비효율을 제거함

- 고용노동부는 초·중급 수준의 실무인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기준 등을 활용하여 인력양성사업 간 훈련목표·수준 및 훈련 내용의 차별화를 추진함

■ (지원방식 개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지원 방식 개편

- (전기차¹²)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승용차 지원수준은 주요국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함
 - 충전편의 제고를 위한 초급속 등 충전기 설치 지원 확대
- (수소차¹³)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 구축 추진

■ 금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¹⁴ 탄소중립도시숲¹⁵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10) (2022년) 1조 6,154억원/신규 100건 → (2023년) 1조 4,669억원/30건, △9.2%

11) (2022년) 1,267억원 → (2023년) - 부처 미요구

12) (2022년) 1조 9,352억원 → (2023년) 2조 4,208억원, +25.1%

13) (2022년) 8,928억 원 → (2023년) 8,383억원, △6.1%

14) 취약계층 시설 중심에서 탄소저감 효과가 큰 건축물로 지원대상 변경,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과 중복투자 방지 위한 사전신 고제 등을 도입함

15) 기존 사업(미세먼지저감도시숲)의 목적·명칭·자원(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 기후기금)을 변경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을 변경함(2023. 상 연구용역 추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년도 핵심사업평가 결과 최종 보고회 개최」, 2022. 9. 23.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2. 미국

분기별 PMA 및 기관별 우선순위목표 업데이트

Quarterly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and
Agency Priority Goal Updates
- 2022. 7., 미국 Performance.gov -

1. 검토 배경

- 대통령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는 정부 운영 및 수행 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우선순위를 정함
 - 작년 11월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대통령 관리 위원회(President's Management Council, PMC)와 함께 바이든-해리스 관리 의제 비전(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을 발표함
 - 미국 정부는 PMA를 발표하면서 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로 하였음
 - 본 자료는 최근 성과포털(Performance.gov)에 업데이트된 PMA 관련 내용을 요약하고, 기관별 우선순위목표(Agency Priority Goal) 업데이트 내용을 다룸

2. 주요 내용

가. PMA 관련 업데이트

- OMB는 성과포털에 분기별로 최신 PMA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OMB는 초기 PMA 발표 이후 연방 인력 및 역량 강화, 우수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연방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더 나은 복구를 위한 정부 사업 관리 영역에서 핵심적인 진전을 이룸
 - 또한 OMB는 우선순위별 리더 및 팀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국민을 위한 점진적·혁신적 변화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 (연방 인력 및 역량 강화) 인력 우선순위 팀(Workforce Priority teams)은 초기 이정표

(milestones)를 설정하였으며, 그중 일부를 달성 완료함

- 특히 인사관리사무국(Office of Person Management, 이하 OPM)은 기술기반(skills-based) 채용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OPM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연방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우수하고 공정하며 안전한 연방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제공) 고객 경험 우선순위 팀(Customer Experience Priority teams)과 리더는 35개 고영향 서비스 공급자(High Impact Service Providers, 이하 HISPs¹⁶⁾)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인간중심(human-centered) 디자인 연구에 착수함

- 또한 대중이 온라인 연방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보안 로그인 서비스(Login.gov)에 대한 투자를 늘려 디지털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노력함

- (더 나은 회복을 위한 정부 사업 관리 영역) 정부 사업 우선순위 팀(Business of Government Priority team)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연방 조달 및 연방 재정 관리를 위한 목표를 정의함

- 해당 목표는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조달 및 재정 지원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며, 다음 업데이트 시 성과포털에 관련 성공지표(success metrics) 및 이정표(milestones)를 게시할 예정임

나. 기관별 우선순위목표(Agency Priority Goal) 관련 업데이트

- 연방 기관들은 분기별로 기관별 우선순위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음

- 성과포털의 기관별 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몇 개 기관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광대역 서비스에 대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확대하고 있음
- 2)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행동 건강 서비스 수혜자 수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음

16) 미국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농업지원청(Farm Services Agency), 산림청(Forest Service),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 자연자원보호청(Natural Resource Conservation Service), 농촌개발국(Rural Development)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의 센서스국(Census), 특허청(United States Patents and Trademarks Office) 등 공공서비스 규모 및 영향력을 바탕으로 35개 기관을 '고영향 서비스 공급자(High Impact Service Providers 이하 HISPs)'로 규정하고 있음

- 3)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노숙을 경험하는(experiencing homelessness) 사람들의 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참고자료

미국 성과포털, “Quarterly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and Agency Priority Goal Updates,” 2022. 7. 8., <https://www.performance.gov/blog/july-2022-updates/>,
검색일자: 2022. 10. 20.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범정부적 PMA 최종본 발표

Public Informs Final Government-Wide PMA Learning Agenda
- 2022. 9., 미국 performance.gov -

1. 검토 배경

-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성과포털(Performance.gov)에 대통령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 최종본을 업데이트 함
 - PMA 초안 발표 이후 OMB는 PMA 학습의제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을 바탕으로 최종본을 업데이트함

2. 주요 내용

- PMA 학습의제는 주요 관리 학습 격차(management learning gaps)를 해소하고, 정부 내·외부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노력임
 - PMA 학습의제는 전략적인 증거 구축 계획으로서,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에 초점을 맞출 것임
- 2021년 말 OMB는 세 가지 PMA 중점 영역에서 초기 질문을 식별하여 PMA 학습의제 초안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최종 PMA 학습의제는 대중과 정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함
 - OMB는 개인, 학계, 협회,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피드백을 수렴하여 PMA 학습의제 초안을 수정함
 - PMA 학습의제는 아래의 세 가지 중점 학습 영역 전반에서 연방 기관의 PMA 우선순위를 지원함
 - 연방 정부는 어떻게 미국 국민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가(노동력 강화 및 권한 부여를 중심으로)?
 - 연방 정부는 어떻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가?
 - 연방 정부는 어떻게 형평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지역 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가?

- OMB는 앞으로도 “PMA Learning Agenda@omb.eop.gov”를 통해 대중으로부터 PMA 학습의 제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관련 진행 상황을 성과포털(Performance.gov)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미국 성과포털, “Public Informs Final Government-Wide PMA Learning Agenda,” 2022. 9. 15., <https://www.performance.gov/blog/final-pma-learning-agenda-released/>,
검색일자: 2022. 10. 20.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보조금 관리: 내무부의 일부 경쟁보조금 사업 지급 절차 개선방안

Grants Management:
Interior Should Improve the Award Process for
Some Competitive Grant Programs
– 2022. 8., 미국 감사원(GAO) –

1. 검토 배경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는 2019~2021 회계연도에 경쟁보조금(competitive grants)으로 40억달러 이상을 지출함
 - 주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대학 등이 보조금을 수령함
-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은 내무부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검토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함
 - 내무부의 보조금 기회 발표, 신청서 검토, 보조금 지급 결정 절차에 대한 설명
 - 내무부의 지급 절차와 관련 연방 보조금 규정의 일치성 여부
- 또한 GAO는 경쟁보조금 지급 절차 개선을 위한 두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함

2. 주요 내용

가. 내무부 경쟁보조금 지급 현황 및 지급 절차

- 미국 내무부는 2019~2021 회계연도에 경쟁보조금(competitive grants)으로 40억달러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과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이하 FWS)은 해당 기간 동안 각각 10억달러 이상을 수령함(〈표 1〉 참조)

〈표 1〉 내무부 경쟁보조금 사업 수 및 보조금 규모

(단위: 개, 달러)

부서	보조금 사업 수	보조금 규모
인디언 사무국 (Bureau of Indian Affairs)	22	115,806,756
토지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20	243,845,998
국토개발국 (Bureau of Reclamation)	37	632,564,509
안전 및 환경집행국, 해양에너지관리국 (Bureau of Safety and Environmental Enforcement/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6	31,279,931
국립공원관리청 (National Park Service)	34	1,012,719,710
노천채광청 (Offi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and Enforcement)	5	191,253,259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49	1,491,941,318
미국 지질조사국 (U.S. Geological Survey)	12	327,903,376
총 계	185	4,047,514,857

자료: GAO 보고서, "Grants Management: Interior Should Improve the Award Process for Some Competitive Grant Programs", <https://www.gao.gov/assets/gao-22-105407.pdf>, 내무부 경쟁보조금 사업 수 및 보조금 규모(4p 〈표 1〉), 검색일자: 2022. 10. 20.

- 내무부의 보조금 지급 절차는 크게 자금 지원 발표, 패널 검토, 보조금 지급 결정으로 나누어짐
 - (자금 지원 발표) 사무국 관계자들은 미국 국고보조금 홈페이지(www.Grants.gov)에 자금 조달 기회에 대한 발표문을 준비 및 게시함. 자금 조달 발표문에는 보조금 신청서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가 포함됨
 - (패널 검토) 심사위원들은 발표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지원서에 점수를 부여함. 검토 패널은 지원서별 기술적 장점을 평가하고 관리검토(management review)를 위한 권장 사업 목록을 작성함
 - (지급 결정 관리) 관리자는 자금 지원을 위한 권장 사업 목록을 검토하고 보조금 수령자를 선정함. 보조금 총지급 규모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관리검토에는 여러 단계가 포함될 수 있음

나. GAO의 내무부 보조금 지급 절차 검토 결과

- GAO는 내무부의 보조금 지급 절차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규정 및 지침을 조사하고 내무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였으며, 18개 경쟁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2019~2021 회계연도 기관 데이터를 분석함
- 그 결과 내무부의 보조금 지급 절차가 일반적으로 관련 연방 보조금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 발표에 지원서 평가를 위한 기준·절차 등의 특정 정보를 포함하고, 장점 평가 절차(merit review process)를 설계 및 실행하는 등의 일반적인 연방 보조금 규정을 따르고 있었음
 - 예를 들어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 이하 NPS) 보조금 프로그램 자금 지원 발표의 경우, 보존·역사·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연방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패널이 발표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모든 적격 신청을 검토 및 평가하고 있음
 -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 이하 USGS)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USGS 전문가 세 명, 주(state) 지질조사 전문가 세명, 학술기관 대표 한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 절차를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보조금 프로그램은 신청서 평가 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문서를 누락함
 -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 Fish and Wildlife Service, 이하 FWS)의 두 개 보조금 프로그램이 자금 조달 발표 시 기준과 가중치를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검토 패널이 절차 기준을 토대로 지원서를 평가하지 못함
 - 또한 15개 보조금 프로그램의 지급 결정을 뒷받침할 문서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FWS·USGS·NPS 내 보조금 프로그램의 경우 지급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았고 특정 지원서에 대한 지급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거부함

다. GAO의 권고사항

- GAO는 내무부의 경쟁보조금 지급 절차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함
- (1)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FWS):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장은 자금 지원 발표에 기준과 가중치를 포함하고, 이러한 표준을 활용하여 지원서를 평가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의 필

요성을 강화하는 각서(memorandum)를 발표해야 함

- (2) 내무부(DOI): 내무부 장관은 검토 패널의 권장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참고문헌

미국 GAO, “Grants Management: Interior Should Improve the Award Process for Some Competitive Grant Programs,” 2022. 8. 23., <https://www.gao.gov/products/gao-22-105407>, 검색일자: 2022. 10. 20.

(작성자: 변이슬 연구원)

3. 영국

공공부문 사기 당국 명령서

(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Mandate)

– 2022. 9. 2., 영국 공공 사기 당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

1. 개요

- 공공부문 사기 당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이하 PSFA)은 공공부문에 대한 사기 및 관련 오류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전문연구센터임
 - 당국은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만 6,00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부의 사기방지 기능을 이끌고 있음
 - PSFA가 구축한 표준과 지침은 중앙정부에서 사기를 이해하고 예방하며 사기행위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도의 견고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및 그 외의 분야에서 더 널리 사용하도록 권장됨
 - PSFA는 재무부와 내각에 사기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로, 위임된 행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를 공유함
- 사기(Fraud)는 사기, 뇌물 수수, 부패 및 오류로 인한 손실 보상을 포괄함
 - 사기 행위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가해자의 의도가 확립된 영역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기 및 오류의 손실 규모와 공공서비스 비용 증가분 등을 이해하고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강조함
- 공공부문 사기 당국이 발표한 명령서의 목적은 공공부문 사기 관련 권한의 위임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것임
 - 이 명령서는 사기 관련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정부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기 당국이 개입한 결과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책임과 역할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PSFA와 각 부처의 장관, 공공기관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대한 참조자료로써 사용되고 있음

2. 공공부문 사기 당국(PSFA)의 임무

-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기 관리 방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 PSFA라는 사기 관리 전문 센터를 설립함
 - PSFA 설립은 정부가 공공부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약 7억 5,000만파운드 이상 투자한 것의 일부이기도 한데, 사기 방지 기능이 진전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투명성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PSFA의 임무〉

- 사기 행위 및 오류 대응을 현대화하고 다양한 수단과 관행,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세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기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문가 주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 공공부문에서 조직적 또는 개별적으로 사기 행위와 오류를 발견하고 예방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 공공부문 사기와 관련한 담화에서 성과중심의 결과를 도출한다.
- 사기 및 오류 관련 전문지식의 봉화이자 공공부문 사기 대응에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된다.

3. 공공부문 사기 당국(PSFA) 명령의 기본 원칙

- PSFA 명령은 각 부처의 장관 및 고위급 관료들의 동의하에 기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PSFA 명령의 기본 원칙〉

-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다.
- 재량적 결정이 아닌 필수 프로세스에 따른다.
- 수처에 연연하지 않고 성공적인 변화에 집중한다.
- 내각과 재무부의 전권을 배후에 둔다.
- 지출팀(Spending Teams)을 포함한 재무부에 통합되어 모든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

- PSFA의 역할 및 프로세스, 기능, 서비스, 기업지배구조, 공공기관과의 관계 등 개괄적인 명령서의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PSFA 명령서의 개관

구분	주요 내용
공공부문 사기 당국 (The 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SFA는 공공부문 사기 관리에 관한 정부의 전문연구센터가 될 것이다. 2. PSFA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사기의 위험과 위협의 정도,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해 정부 내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낼 것이다. 3. PSFA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초점을 맞추되 관행을 공유하고 더 넓은 공공부문에 이용 가능한 표준을 만들 것이다. 4. PSFA는 정부 전반에 걸쳐 사기행위를 발견, 맞서 싸우며, 오류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지식을 한데 모아 정부의 '사기 대응 기능'의 중심이 될 것이다. 5. PSFA는 감사원(NAO)에 활동 및 보유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여기에는 성과 정보와 필수 프로세스 및 데이터 요청의 준수여부도 포함된다. 6. PSFA는 정부의 사기 행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연례 보고서와 사기 관련 최신 증거자료 및 성과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필수 프로세스 (Mandatory Process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PSFA는 부처와 공공기관을 위한 의무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신규 지출의 주요 영역에서, 설계 단계 사전 발표 중 초기 사기 행위 영향평가의 사용 b. 사기 및 오류 수준(levels of fraud and error)과 실행 계획 및 측정 기준에 대한 진행 상황, 분기별 성과 데이터 제출 c. 사기 대응 기능 표준(the Counter Fraud Functional Standard)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증: 자체 평가, 부처 내 보증 및 PSFA 자체 수행 보증 검토를 포함 d. 사기 행위 관리에 대한 연간 실행 계획 및 측정 기준에 대한 합의 8. 의무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록한다. 9. PSFA와 재무부가 추가적인 의무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이는 최고운영책임자 네트워크(the Chief Operating Officers network) 및 재무부 지도자위원회(the Finance Leaders Board)와 협의하고 장관들과 합의할 것이다.
PSFA의 기능 (PSFA Function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PSFA는 공공부문에 대한 사기를 이해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성과를 감독할 것이다. 11. PSFA는 사기 위협에 대한 표적 검토와 사기 활동에 대한 표적 품질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PSFA와 공공기관에 권고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12. PSFA는 사기 대응 전문가를 통해 사기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할 것이다. 이것은 공공부문 사기와 더 광범위한 사기에 대응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위험의 감독 (Oversight of Risk)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PSFA는 정부 전반의 사기 위협을 조사하는 '글로벌 사기 위험 평가(Global Fraud Risk Assessment)'를 만들고 유지할 것이다. 14. PSFA는 지출의 가장 높은 위험 영역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는 '고위험 사기 포트폴리오(High Fraud Risk Portfolio, 이하 HFRP)'를 개발할 것이다. 15. 어떤 지출 영역이 HFRP의 일부가 되는지는 PSFA와 재무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다.
PSFA의 서비스 (PSFA Servic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PSFA는 전문적인 사기 방지 활동을 위해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부록 A) 17. PSFA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분류 과정을 거칠 것이다. 18. PSFA는 자문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p>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p>	<p>19. PSFA는 최고경영자(CEO)가 이끌 것이며, CEO는 사기에 따른 손실 관리와 규제 관련 전문가가 될 것이다.</p> <p>20. PSFA의 CEO는 내각 및 재무장관에게 직접 브리핑할 것이다.</p> <p>21. 브리핑 시 PSFA는 내각 및 재무부 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이다. 표준 관행에 따라 재무부는 지출 프레임워크에 명시된 대로 공식적인 지출 승인에 대해 조언할 책임이 있으며, PSFA는 사기의 위험, 완화를 위한 잠재적 조치 및 사기대응 계획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 조언할 것이다.</p> <p>22. PSFA 리더십팀(The PSFA leadership team)은 서로 다른 분야의 공인 사기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을 것이다.</p> <p>23. 자문단의 위원은 내각 장관이 임명한다.</p>
<p>공공기관과 PSFA (Public Bodies and the PSFA)</p>	<p>24. 정부 지출 및 계획 내에서 사기 위험 관리는 PSFA의 실시간 감독하에 이루어지며, 그 책임은 해당 지출 및 계획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회계담당자에게 있다.</p> <p>25. 공적자금관리 및 사기 대응 표준 기능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직면한 위험 수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사기 대응 기능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p> <p>26.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투자-비즈니스 사례를 개발하여 사기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와 함께 PSFA는 교차가능한 사례를 개발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할 것이다.</p> <p>27.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PSFA가 제공하는 지침과 수단을 활용하여 사기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사기 대응 전문가와 실무자를 별도로 고려하여 각 기관의 수준과 규모에 맞는 접근방식을 갖출 것이다.</p> <p>28. PSFA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위험 수준과 규모에 따라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다.</p> <p>29. PSFA는 모든 요청을 표준 분기 수익으로 제한할 것이다. 사기 행위 통제 및 대응과 관련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외로 인정되나, 별도로 기록될 것이다.</p> <p>30. PSFA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요청은 적시에 공유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록되어야 한다.</p> <p>31. 각 부처의 장관 및 공공기관의 사기 위험 및 위기 평가는 PSFA와 공개적으로 공유되지만, 감사원 및 관련 위원회를 제외한 준비조직(originating organisation)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유되지 않으며, 불합리하게 보류되어서는 안된다.</p> <p>32. PSFA는 성과 및 명령 프로세스 준수에 관한 데이터를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p> <p>33. PSFA 프로세스가 준수되지 않거나 권고사항이 수용·이행되지 않은 경우,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p> <p>34. PSFA는 DWP 및 HMRC와 MoUs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규모와 그들의 사기 행위의 범위에 비추어 볼 때 예외이다.</p>

자료: 영국 공공부문 사기 당국, 「공공부문 사기 당국 명령서(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Mandate)」

참고자료

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EPublic Sector Fraud Authority Mandate, 2021, 2022*, 9. 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ublic-sector-fraud-authority-mandate>, 검색일자: 2022. 10. 6.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4. 아일랜드

2022년 지출검토 보고서

(The Spending Review papers for 2022)
- 2022. 8. 19,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1. 개요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은 2022년 8월 첫 번째 지출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출검토가 공공지출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역할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
 - 아울러, 스포츠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the Gaeltacht and Sport)인 잭 챔버스(Jack Chambers)와 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with responsibility for the Office of Public Works) 패트릭 오도노반(Patrick O'Donovan)은 지출검토 보고서와 그 결과가 각 부처의 우선순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전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임

참고

아일랜드 지출검토제도

◆ 아일랜드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

- 지출검토 보고서(The Spending Review papers)는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적인 증거자료로서, 매년 기존 지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규 지출을 검토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는 매년 지출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 활용할 각 부처의 정책 계획과 예산 지출 전략을 검토, 이렇게 축적된 검토 결과를 중장기 예산 배분 시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책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지출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을 식별하고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음

- 아일랜드 정부는 공공지출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존 지출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지출의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증가시키는 재정전략을 목표로 함

■ 본고에서는 2022년 8월부터 9월까지 발간된 7개의 지출검토 보고서를 요약·정리하였으며, 스포츠, 공공자산관리, 보건 등 주요 검토 분야와 내용은 <표 1>과 같음

<표 1> 아일랜드 2022 지출검토 보고서 주요 내용

분야	제목	주요 내용
스포츠 (1)	중점 정책 평가: 스포츠 자본 및 장비 프로그램(SCEP)의 분배 효율성 (Focused Policy Assessment: The Distributive Efficiency of the Sports Capital and Equipment Programme (S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포츠 자본 및 장비 프로그램(the Sports Capital and Equipment Programme, 이하 SCEP) 관련 정책을 검토한 보고서 - SCEP 적용 및 교부금의 추세를 분석하여 스포츠정책의 대상 지역에 자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SCEP의 분배 효율성을 평가함 - 이러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SCEP 체계 전반을 파악할 수 있음
공공자산 관리 (1)	경상수지와 자본지출의 균형성 평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An Assessment of the Balance of Current and Capital Expenditure: OPW Estate Management Portfol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W* 자산 포트폴리오(OPW Estate Portfolio)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보고서 - 사무공간 편의시설(office accommodation)에 대한 경상 및 자본 투자 사이의 균형에 대해 분석함 - 특히 사례 연구를 통해 잠재적인 자산관리 옵션의 상대적 장기 비용을 평가하고, 가장 비용효율적(cost-effective)이고 적합한 사무공간 편의시설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거를 제공함 * Office of Public Works(공공사업청)
보건 (5)	장기 질병 계획의 검토 (Review of the Long Term Illness Sc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의 현행 지역별 약제 제도(pharmacy scheme)의 목적과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맥락을 검토한 보고서 - 장기 질병 계획의 주요 지출 동인(expenditure drivers)에 대해 분석함
	보건에 대한 인구 기반 자금 지원: 증거 검토 및 지역 프로파일 (Towards Population-Based Funding for Health: Evidence Review and Regional Profi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의 의료 시스템은 2024년까지 새로운 지역 보건 지역(New Regional Health Areas)과 인구 기반 자원 배분(Population-Based Resource Allocation, 이하 PBRA)을 시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실질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PBRA는 의료 결과와 자원 분배 모두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자원분배를 위한 자금지원 모델을 구축함 - 이 보고서는 구현해야 할 가장 적절한 PBRA 모델에 대한 의사결정에 증거를 제공하고 있음

분야	제목	주요 내용
보건 (5)	의료 인프라 수용력 분석 (An Analysis of Healthcare Infrastructure Capa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병상 및 방사선 장비와 같은 의료 인프라 관련 수용력에 관한 분석 보고서 - 의료 인프라 수용력이 지역보건영역(Regional Health Area)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일정하지 않음을 의미함 - 따라서 의료 인프라 관련 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지역별 수용력을 고려해야함 -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라, 다가오는 전략적 의료 투자 프레임워크(Strategic Healthcare Investment Framework, SHIF)에 의해 시행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증거 기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의료 인프라 구축 분석 (An Analysis of Built Healthcare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일랜드 보건당국(Health Service Executive, 이하 HSE) 산하 지역사회 내의 물리적 의료 인프라와 관련한 분석을 제공함 - 본 분석에서는 미래의 의료 인프라 투자를 위한 지역사회 유지관리 및 자원관리, 에너지 효율 등 기능적 적합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함
	간호인력공급시스템 동태모델 (A System Dynamics Model of Nursing Workforce Suppl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 역학 모델링(System Dynamics Modelling)을 활용하여 간호 인력 공급 모델을 개발함 -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인력채용 실천 강령에 따른 아일랜드의 공약을 충족하고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일랜드 내 학생 간호사 입학정원의 잠재적 증가를 설명함

자료: 아일랜드 공공지출개척부, 「2022년 지출검토보고서(The Spending Review 2022)」- 1~2부

참고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Spending Review 2022 – Tranche 1 Executive Summaries*, 2022. 8. 19., <https://www.gov.ie/en/collection/32ecd-spending-review-2022/>, 검색일자: 2022. 10. 5.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Spending Review 2022 – Tranche 2 Executive Summaries*, 2022. 9. 9., <https://www.gov.ie/en/collection/32ecd-spending-review-2022/>, 검색일자: 2022. 10. 5.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2022년 하계경제담화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2)
- 2022. 7. 4.,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

1. 하계경제담화 주요 내용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는 2023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정부의 중기예산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하계경제담화(The Summer Economic Statement, 이하 SES)를 개최함
 -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력은 확보되었으나 경제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
 - 경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 고용지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6% 상승함에 따라,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이 제한적이지만 영구적인 피해(scarring)였음을 반증함
 -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는 팬데믹으로부터의 탈출이 완전히 순탄하지 않았는데, 수요의 빠른 회복이 공급 제약에 부딪혀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변화는 인플레이션 상황을 악화시킴
 - 일부 예방적 저축(precautionary saving)과 함께 실질 소득의 감소는 소비지출의 회복이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 경제 전망에 대한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확실하나, 특히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대륙 공급 전면 철수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위험요소로 남아있음
 - 아일랜드의 주력 수출시장에 심각한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음
 - 정부는 가계에 상당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3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으로 예상됨
 - 정부는 이미 가계에 대한 물가 상승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소득의 1% 수준인 약 24억유로의 재정지원을 단행한 바 있음
 - 2023년 예산안(Budget 2023)에는 약 67억유로에 달하는 종합 패키지(overall package)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이는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를 피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기 위함임
 - 종합 패키지는 56억 5,000만유로에 달하는 추가 공공지출과 10억 5,000만유로에 달하는 조세 지원으로 구성될 예정임

- 가계지출 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달리해야 함
 -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흐름이 철회되고 있음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나타남에 따라 차입 비용이 상승 궤도에 오름
 - 아일랜드의 공공부채는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이며, 향후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및 의료인프라 등 미래의 정책과제를 위한 자금 조달은 공공재정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것임
 - 높은 부채 수준과 더불어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은 현재의 세금 및 지출 정책이 다가올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음을 의미함
 - 그럼에도 어려운 선택들이 계속해서 주어질 것이고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피하지 않을 것임

2. 예산 전략의 개요

- 아일랜드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중기예산전략을 조정하고 있음
 - 정부는 지난해, 2023~2025년까지 매년 5%씩 공공지출 증가율을 기반으로 하는 중기예산 전략을 발표하였으나, 이는 2%의 인플레이션율을 가정하고 연간 지출증가 및 성장률 추세를 고려한 목표치였음
 -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이 전략은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핵심지출(core spending)은 6.5% 증가할 예정임
 - 정부는 내년에 858억유로의 핵심지출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 지출 규모는 6.5%에 달함
 - 이 상한선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56억 5,000만유로의 지출 예산 패키지(expenditure budgetary package)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예산에서 17억유로가 증가한 것이며, 각 가구에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임
 - 핵심지출의 6.5% 증가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가계 및 핵심 공공서비스를 보호함으로써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정부는 또한 45억유로의 비핵심 지출(non-core expenditure)을 임시조치로 예정하고 있음
 - 이 지출은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잠재적이고 지속적 요구사항을 대비한 것임

- 전반적인 예산 패키지(Overall budgetary package)는 과세 조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아일랜드 정부는 내년에 10억 5,000만유로의 종합 세금 패키지(overall taxation package)를 시행할 계획임
 - 이는 기존 전략에서 설정된 금액의 두 배이며, 다시 한번, 기존 전략에서 가정된 2%의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매개변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임
 - 다가오는 추계 예산안에서 조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금 계층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는 것임

- 인플레이션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 전망은 매우 불확실함
 - 하반기 경제 전망은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은 2022년의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불확실성이 매우 크지만 올해와 내년의 세수에는 매우 미미한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인세 수입의 강세 때문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법인세 수입이 대유행 이전 수준에서 변하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하에서는 GDP 대비 세수는 올해 -1.5%, 내년 -1.5%의 범위에서 적자로 예상됨

참고자료

Department of Finance;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Summer Economic Statement 2022*, 2022. 7. 4., <https://www.gov.ie/en/publication/29e0b-summer-economic-statement-2022/>, 검색일자: 2022. 10. 5.

(작성자: 강경민 연구원)

5. 캐나다

2022-24 국가행동계획 발표

(Canada launches 2022-24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 2022. 9. 22., 재정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 캐나다 정부는 2년 주기로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국가행동계획의 목적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임
- 2022-24 주요 주제 및 주제별 책무는 다음과 같음
 -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growth)
 - 국가 차원에서 기후 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신뢰성 높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력 향상
 - 민주주의와 공용 공간(Democracy and civic space)
 - 허위 정보 차단, 공정한 선거 보호,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조성, 온오프라인에서 공공 공간 보호 등을 통한 민주주의 확보
 - 국가 재정 투명성 확보(Fiscal, financial and corporate transparency)
 - 공공 수익 소유 등록부(public beneficial ownership registry)를 활용하여 자금 세탁 및 탈세를 방지하고, 정부 지출을 추적하는 시스템 개발
 - 공정(justice)
 - 국민과 기업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공공 데이터 개방(Open data for results)
 - 국민이 원할 때 쉽게 얻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을 정부 업무에 포함

참고자료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anada launches 2022–24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2022. 9. 22.,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news/2022/09/canada-launches-202224-national-action-plan-on-open-government.html>, 검색일자: 2022. 11. 9.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 2022. 9. 22., <https://open.canada.ca/en/content/national-action-plan-open-government>, 검색일자: 2022. 11. 9.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CANADA’S NATIONAL ACTION PLAN ON OPEN GOVERNMENT 2022–24”, 2022. 9. 22., <https://opencanada.blob.core.windows.net/opengovprod/resources/b17b6dab-febb-4bca-8328-2bd19220ee96/en-2022-24-national-action-plan-on-open-government.pdf?sr=b&sp=r&sig=UITcIHtkmrbIRlm8zr/J51kq0vKKNOMu73f6HDaluqQ%3D&sv=2015-07-08&se=2022-11-09T05%3A59%3A22Z>, 검색일자: 2022. 11. 9.

(작성자: 이응준 연구원)

2020-2021 공공서비스 목록

(2020-21 Service Inventory)

– 2022. 9., 재정위원회 사무국(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 캐나다 재정위원회 사무국은 ‘정부 인포베이스(GC InfoBase)’ 온라인 플랫폼에 각 부처가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2020~2021년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개하였음
 - 제공된 목록에는 72개의 부처와 기관이 해당 연도에 제공하였던 1,375개의 공공서비스와 2억 6,436만 5,923건의 공공서비스 신청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공개함
- 각 부처와 기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 담당 기관, 서비스 제공의 형태와 이용 요금, 서비스의 목적, 서비스 신청 건수, 관련 사이트 방문자 수,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여부 등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성과 기준을 공개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과 성과 달성 정도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참고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services/-.-\(panel_key.-.'services_intro\)](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services/-.-(panel_key.-.'services_intro)), 검색일자: 2022. 10. 5.

(작성자: 이용준 연구원)

6. 프랑스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의 업데이트

(La plateforme de datavisualisation des données de la performance actualisée)
 – 2022. 7. 6., 프랑스 재무부(France budget) –

- 2021년 연간 성과보고서(Rapports Annuels de Performances, RAP¹⁷⁾)를 바탕으로 한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이 업데이트되었음
 - 의회와 시민들은 플랫폼을 통해 일반 예산의 32개 임무에서 달성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은 크게 임무, 각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별 예산 및 인원, 프로그램별 결과, 각 임무의 대표적인 지표, 2007년 이후 공공 지출의 성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그림 1]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



자료: 프랑스 성과데이터 시각화 플랫폼(<https://datavision.economie.gouv.fr/performance/?view=S%C3%A9lectionnez%20une%20mission%20du%20budget%20g%C3%A9n%C3%A9ral%20de%20l%27%C3%89tat>)

17) 성과관리연간보고서(Rapport Annuel de Performance, 이하 RAP)는 예산 법안에 첨부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해 예산 법안 초안을 검토 할 때, 성과관리연간계획에서 이뤄진 약속의 이행에 대해 보고함

참고자료

프랑스 재무부, <https://www.budget.gouv.fr/calendrier-budgetaire?date=202207#actu-16270>, 검색일자: 2022. 9. 28.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7. 네덜란드



데이터 분석 과정 온라인 강좌 개설

(Netherlands Court of Audit publishes online course on Data Analytics in Audits)
 – 2022. 9. 28., 네덜란드 감사원(Netherlands Court of Audit) –

- 점점 많은 정부관련 정보가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어 관련 공무원들은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네덜란드 감사원은 감사관련 데이터분석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함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숨겨진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며 투명하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정량적 데이터 분석은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감사의 모든 단계를 용이하게 함

- 온라인 강좌는 전 세계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사용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모든 공무원에게 무료로 제공됨
 - 온라인 강좌는 특정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음
 - 네덜란드어,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및 포르투갈어로 제공됨
 - 코스는 총 90분짜리로 4개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료 시 참가자에게 디지털참여 인증서가 수여됨

[그림 1] 강좌 종류


강의 1. 감사 관련 데이터 분석연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	
강의 2. 감사목적에서 데이터 질문까지 제공	
강의 3. 감사에서 통계프로그램 R 사용하기	
강의 4. 통계프로그램 R 사용하기	

자료: 네덜란드 감사원(<https://english.rekenkamer.nl/latest/news/2022/09/28/netherlands-court-of-audit-publishes-online-course-on-data-analytics-in-audits>)

참고자료

네덜란드 감사원, <https://english.rekenkamer.nl/latest/news/2022/09/28/netherlands-court-of-audit-publishes-online-course-on-data-analytics-in-audits>, 검색일자: 2022. 9. 28.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CONTENTS

1. 국내 연구 동향
2. 국외 연구 동향

Ⅱ. 재정성과관리 연구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박노옥, 『재정포럼』, 제314호, pp. 8~29 –

1.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 논의 필요성

- 고령화 추세 지속, 팬데믹 대응 지출 확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 미래 기후 위험 대응 관련 재정 소요 증가,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조달 추세 지속 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표 1〉 연도별 국가채무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차 추경)	2022년 (1차 추경)
관리재정수지	18.5	10.6	54.4	112.0	126.6	110.8
국가채무	660.2	680.5	723.2	846.6	965.3	1,075.7

자료: 박노옥,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2022년 8월호, p. 8.

- 코로나19 이후의 중요한 재정혁신 과제 중 하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의 틀(fiscal policy framework) 혁신과 실효성 있는 운용임
- 특히, 준칙 기반의 재정정책(rule-base fiscal policy)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재정 운용 기조에 대한 범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고 미루어지고 있는 재정구조의 근본적 혁신 자체를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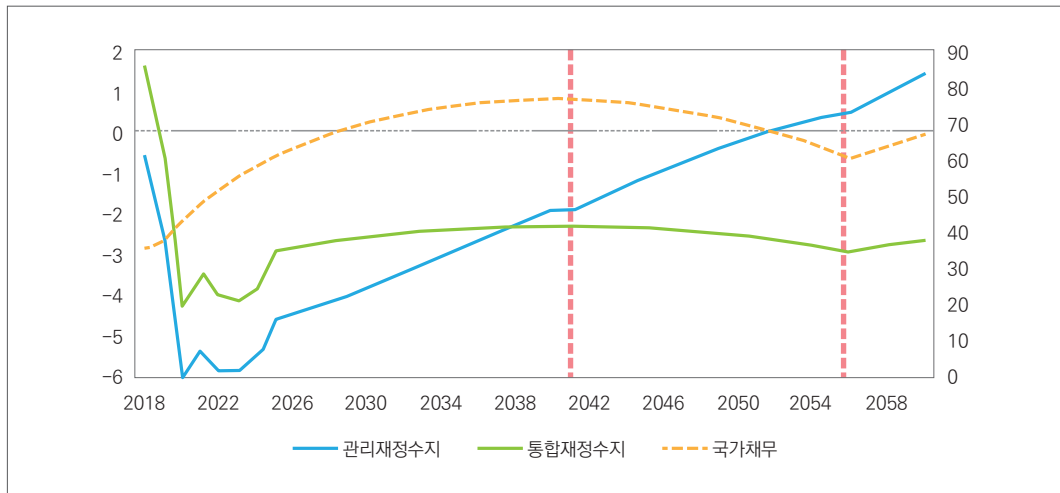
- 본고에서는 2020년 12월에 제안된 재정준칙에 근거한 기준선 전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준칙 관련 쟁점을 도출함

2. 우리나라 재정준칙안 진단과 쟁점

- 2020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장치가 없으며, 재정준칙에서 벗어날 경우 수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제2세대 재정준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재정준칙의 준수 강제 장치의 강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안은 앵커와 목표 자체가 연성이라는 점에도 한계가 있지만, 동시에 준수 강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IMF(2021)는 우리나라 재정준칙하의 장기재정을 2040년대 초반에 국가채무 수준이 75%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가 감소 추세로 전환하지만, 205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증가하며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림 1] 2020년 재정준칙안(2020. 12.)하의 장기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비율, %)



자료: 박노욱,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2022년 8월호, p. 12.

- 재정준칙안에 기반한 국가채무 기준선 전망은, 상당한 수준의 재량지출 축소 또는 국민부담 증가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함
 -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의 연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이 5.8%인데, 2050년대 초반에는 흑자로 전환시켜야 하고 2060년부터는 연평균 1.4% 이상의 흑자를 유지해야 함
- 재정준칙안은 통합재정수지 준칙을 활용함으로써 통합재정수지 적립금을 통해 2050년대 후반까지의 재정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개혁을 지연시켜서 2050년대 후반 이후의 충격이 커지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

3.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

- 중기적 재정혁신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한 재정준칙 설정
 -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더불어 일반 재정도 재정적자 구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준칙에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다루는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같이 사회보험과 일반 재정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재정 정상화 목표를 준칙으로 설정하여 재정개혁을 촉진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임
 - 두 번째는, 현재 안과 같이 사회보험 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재정준칙으로 활용하되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험수지를 통합한 불투명한 수지만을 재정준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바탕으로 관리재정수지와 사회보험 재정수지 준칙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임
- 재정준칙의 중장기 앵커와 연간 수지 및 지출 목표의 명시화
 -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필요한 재정여력을 담보하는 국가채무/부채 수준을 평상시에 중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앵커로 설정하고, 연간 경기변동을 고려하여 중기적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형태로 재정준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 재정준칙 준수 모니터링과 강제 장치로서의 독립적 재정기구 도입
 - 제2세대 재정준칙의 특성은 재정준칙의 유연성 강화와 더불어 강제기제(enforcement mechanism)의 강화임
 - 유연성 강화의 부작용은 재정준칙이 복잡해져서 국민과의 소통이 어렵고 준수 여부의 판

단과 강제가 어렵다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독립적인 재정기구의 수립과 운영을 통해 재정준칙 관련 모니터링과 평가 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에서 독립적 재정기구 및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는, 재정에 관한 통합적 의사결정구조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이며, 두 번째는, 준칙 기반의 재정운용을 위한 정보 생산과 진단 분석 기능에 초점을 두는 시각임
-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과 범위는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기능은 재정전망, 재정 지속가능성 진단, 재정준칙 모니터링 및 평가임
- 독립적 재정기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정보에 대한 실시간에 가까운 접근권, 법적 독립성, 인사권 독립, 선거주기를 초과하는 임기 보장, 언론과의 직접 소통 그리고 안정적 예산보장 등이 있음

■ 재정준칙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

- 경기동행적 재정지출을 유도할 위험이 있음
- 재정지출 총량만을 통제하므로, 재정지출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단기주의를 촉발하거나 방지할 위험이 있음
- 분식회계나 예산 외 수단을 동원하여 재정준칙을 회피할 위험이 있음

4. 결론

- 과도한 재정적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경기동행적 재정 운용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기에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편향성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도록 선택되어야 함
- 재정준칙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하며 재정운용상에 구체적인 지침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력과 복원력이 있어야 하고, 모니터링과 강제하기가 용이해야 함
-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되 경기 안정화, 경제의 장기적 성장, 그리고 포용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 또는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준칙은 찾기 어려우며, 일정 수준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함

- 따라서, 재정준칙 설정 시, 상충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개별 국가의 재정운용의 중요한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지표 간의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재정준칙의 수립 시 중장기적인 앵커 성격의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하고, 연간 및 중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운용 준칙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국가부채 수준 설정 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국가부채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부채 수준은 상한이라는 기준보다는 평상시에 유지해야 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자료

박노욱, 「재정혁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제314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pp. 8~29.

(요약·정리: 이응준 연구원)

2. 국외 연구 동향

미국 연방 기관에 대한 정책 철회: 미국 연방 보조금 삭감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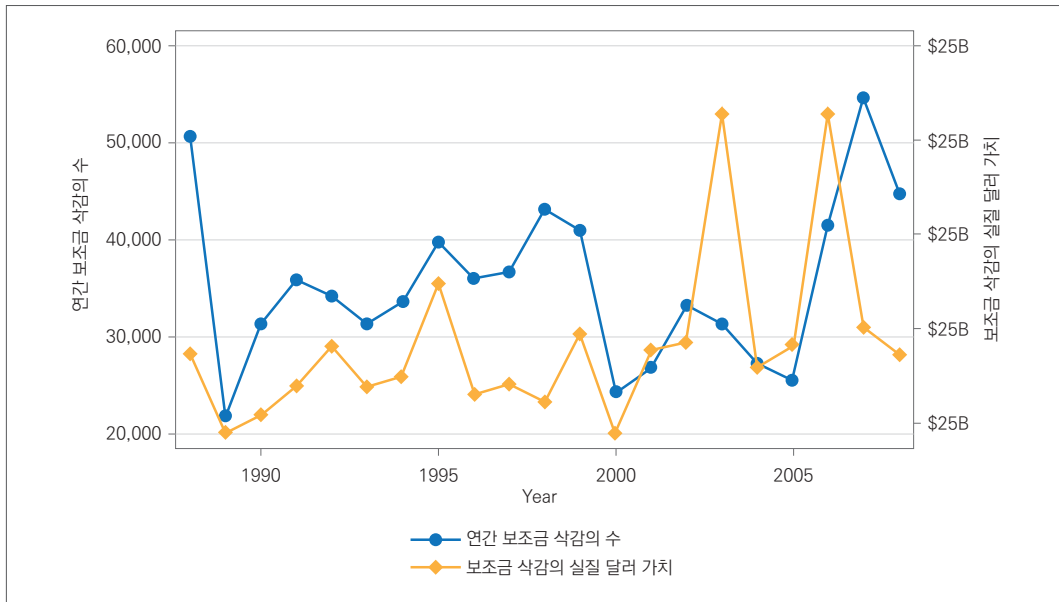
(The Retraction of Policy Benefits across US Federal Agencies: Programmatic Cutbacks and Executive Control of US Federal Grant Retrench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4), pp. 682~691

– George A. Krause and Matthew Zarit –

-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연방 기관들은 보조금 삭감이라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삭감이 다른 정책보다 일부 연방 기관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와 보조금 삭감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

[그림 1] 연간 보조금 삭감의 수와 보조금 삭감의 실질 달러 가치



자료: George A. Krause and Matthew Zarit, "The Retraction of Policy Benefits across US Federal Agencies: Programmatic Cutbacks and Executive Control of US Federal Grant Retrench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4), 2022, p. 683.

- [그림 1]은 1988~2008년 동안 17개 주요 미국 연방 기관의 표본에서 얻은 보조금 삭감 추이를 보여주며, 다른 형태의 예산 삭감과 달리 보조금 삭감은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보조금의 삭감과정은 행정부의 역할이 크며, 공공기관의 대응 능력 확인을 통해 “계획된 구조적 변화(planned organizational change)”에 전략적으로 참여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반영함
 - 대통령은 응답률이 낮은 기관뿐만 아니라 정책 및 관리 역량이 낮은 지도자가 이끄는 기관에 큰 부담을 주어 연방 기관에 대한 행정 통제를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사용하기도 함
- 미국 연방 보조금은 정부 활동의 주요 원천을 구성하지만, 기존의 미국 연방 보조금 삭감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음
 - 이는 대통령 정책 우선순위(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에 따라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조금의 삭감이 종종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기 때문임
- 보조금 삭감은 대통령과 의회의 협상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결정함

1. 보조금 삭감을 위한 대통령 전략

- 보조금 삭감 및 분배는 정책 목표와 선거 목표를 달성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
 - 보조금 삭감은 기존 자금 조달 약속의 일부를 폐지하는 것으로 미국 연방 기관에 큰 부담을 주게 됨
 - 이러한 부담으로 행정 기관 내의 불안정 초래와 사기를 저하시키며, 공공 관리자들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행정부는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역량이 낮은 기관이 관리하는 보조금을 대상으로 축소하는 전략을 사용함
- 대통령은 통제하기 어려운 기관에 상대적으로 큰 보조금 삭감을 하고, 상대적으로 통제가 쉬운 기관에 대해서는 적은 삭감을 하도록 함
 -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이 연방 기관의 지출을 164억달러를 삭감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을 때,

장관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였던 주택도시개발부에서 63억달러를 삭감한 반면, 충성도가 높았던 농무부는 9,600만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은 삭감을 겪음

- 임명된 기관장의 정책과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낮은 기관에는 보조금 삭감 비중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정책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가진 기관장의 기관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 비중을 줄임
 - 1986년 레이건 대통령은 다양한 기관에 걸친 광범위한 보조금 삭감을 제안하였으며, 지도자의 관리 및 경영 능력에 따라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보조금 삭감을 진행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을 검증하여 어떤 요인이 보조금 삭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함
 - 가설 1. 보조금 삭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이 이념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수준과 반비례할 것이다.
 - 가설 2. 보조금 삭감은 기관장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반비례할 것이다.
 - 가설 3. 보조금 삭감은 기관장의 관리 능력과 반비례할 것이다.
 - 가설 4. 보조금 삭감은 기관장의 정책 전문성과 반비례할 것이다.
 - 가설 1과 가설 2는 보조금 삭감과 기관장의 이념 및 충성심의 관계를 보여주며, 가설 3과 가설 4는 보조금 삭감과 기관장의 능력 및 리더십의 관계를 보여줌

2. 데이터 및 실증 전략(Data and Empirical Strategy)

- 데이터는 연방보조금지원데이터 시스템(Federal Assistance Award Data System, 이하 FAADS)¹⁸⁾에서 1988년 1분기에서 2008년 4분기까지 기간 동안의 17개의 주요한 미국 연방 정부들이 관리하는 1,227개 프로그램 샘플¹⁹⁾을 사용함
 - 표본은 해당 기간 동안 각 연방 보조금 손실/감축이 결정된 총 74만 4,649개로 구성됨
- 종속 변수로는 보조금 삭감액이며, 주요 독립 변수로는 대통령의 정당(President's Party), 기관 이념(Agency Ideology), 대통령 충성도(Presidential Loyalty), 관리역량(Managerial Competence), 정책 역량(Policy Competence)을 사용함
 -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정당(President's Party)과 기관 이념(Agency Ideology)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을 사용하며, 대통령의 정당과 기관 이념이 일치

18) FAADS 데이터는 미국 연방 기관이 시행한 보조금 할당에 대한 기관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개별 보조금 특정 데이터를 제공함

19) 기존의 재량적(비재량적) 연방 보조금에 대한 2009년 보조금 삭감액의 고정 달러 총액을 사용함

- 할 때는 1, 이념적으로 온건한 기관은 0, 이념적으로 반대되는 경우에는 -1로 나타남
- 가설 2는 대통령 충성도 변수를 사용하여, 이는 임명 당시 알려진 임명권자에 대한 기관장의 성향을 활용함
 - 가설 3은 관리역량 변수를 사용하며, 미국 연방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 배경 및 자격과 관련하여 지명 당시 알려진 기관장의 관리 능력에 대한 잠재적 특성 척도를 사용함
 - 가설 4는 정책 역량을 사용하며, 정책 전문 지식에 대한 잠재적 특성 척도를 사용함

3. 결과 및 결론

- 연구결과를 통해 대통령 정책과 관련하여 노력하는 연방 기관 또는 정책 및 관리 부문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장들의 기관의 경우, 반대의 성격을 지닌 기관들에 비해 보조금 삭감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가설 1의 경우, 대통령과 공공기관의 이념이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기관들에 비해 보조금 삭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설 2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을수록 보조금 삭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가설 3의 경우, 기관장의 관리 능력은 보조금 삭감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로 나타남
 - 가설 4의 경우, 기관장의 정책 역량이 높을수록 보조금 삭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대통령은 정책 목표 및 선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삭감을 활용하며 연방 기관에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음
 - 보조금 삭감은 연방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이념, 충성도와 같은 성향과 기관장의 관리 및 정책 능력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됨

참고자료

George A. Krause and Matthew Zarit, "The Retraction of Policy Benefits across US Federal Agencies: Programmatic Cutbacks and Executive Control of US Federal Grant Retrenchmen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4), 2022, pp. 682~691.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협력 및 성과에 대한 메타 분석: 협력 성과 부문별 차이에 대한 시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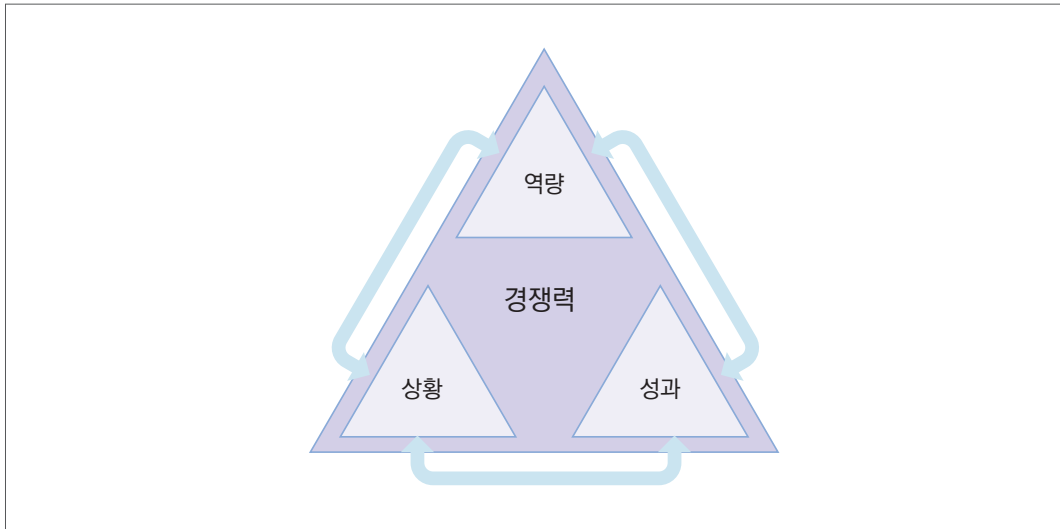
(Softening Performance's Pitfalls by Integrating Context and Capacity:
A Government Competitiveness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5), pp. 887~892
- Robert K. Christensen · Tobin Im · Gregory Porumbescu -

- 정량적 성과지표(quantified performance)를 사용하여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행정 과정을 과소평가하고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지원을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의 중요성을 강조지만,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백신과 같은 의료 접근을 막는 구조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관심이 적음
 - 중요한 문제는 예방접종을 받은 개인의 수와 같은 확인하기 쉬운 성과 결과가 형평성과 같이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힘든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것임

- 이러한 정량적 성과지표(quantitative performance)는 확인하기 쉬운 성과 결과를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조직의 책임보다 개인에게 책임을 강조함
 - 정량적 성과평가에 대한 위험과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평가 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광범위한 부문의 성과 상관관계를 무시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경쟁력 프레임워크에서 상황에 따른 성과관리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과관리 실천에 어떤 기여를 할지 설명함
 - 과거 연구를 검토하고 혼합적인 성과관리 체제의 개발을 촉구하면서 조직이 역량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의 중요성을 주장함(Holmberg, Rothstein and Nasiritousi 2009; Hood 2012; Poister and Streib 1999)(Jakobsen et al. 2018)
 - 상황에 따른 체제는 상황과 역량을 연결하고([그림 1] 참조), 이를 통해 조직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진정한 경쟁력 있는 관리 실천을 촉진함

[그림 1] 정부 경쟁력: 상황 및 역량과 성과 통합



자료: Robert K. Christensen and Tobin Im and Gregory Porumbescu, "Softening Performance's Pitfalls by Integrating Context and Capacity: A Government Competitiveness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5), 2022, p 888.

1. 성과관리의 함정

- 정부의 성과관리를 근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통적인 군사 관료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음
- 현대화의 노력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정부의 형편없는 성과가 원인이라고 탓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음
 - 현대화의 노력은 관료주의적 재량권이 정부의 저조한 성과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동시에 해석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기여함
 - 성과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내하고 성과평가의 수월함을 위해서 성과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성과 기반의 책임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러한 현대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례에서 이러한 시스템은 관리되는 작업의 고유성과 다양한 공공기관이 발전하는 가치를 경시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정량화된 성과지표, 계약된 서비스 제공 및 성과 기반 책임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공 관리시스템(New Public Management)은 독단적 성과관리 실행이 현대화를 방해하는 무수한 방식

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음

- 성과관리 시스템의 주된 문제는 민주적인 가치보다 기술 관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에 있음
 - 성과관리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법은 중요한 특성과 뚜렷한 공공가치를 희생시키는 공공서비스를 초래함

2. 상황 및 역량과 성과관리의 통합(Integrating Performance Management with Context and Capacity)

- 공공기관의 성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상황과 역량이 수행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상황(Context)
 - 잘 개발된 연구의 상황은 성과관리 체제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역할을 생각할 수 있게 함
 - 역량(Capacity)
 - 성과를 역량과 잘 통합하는 것은 중요하며, 넓은 의미에서 역량은 입력을, 성과는 출력 및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음

3. 상황, 역량 및 성과 연결: 경쟁력 프레임워크(Linking Context, Capacity, and Performance: A Competitiveness Framework)

- 경쟁력 프레임워크의 주요 목적은 성과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조직의 학습 및 핵심적인 상황과 역량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데 있음
- 경쟁력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질문과 성과관리 체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관리자들은 각 조직에 질문을 정기적으로 제기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필요함
 - Q1: 상황과 조직의 역량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상황과 역량의 연결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함
 -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상황별 지표에 대한 고려
 - 조직 환경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할 상황별 지표에 대한 고려
 - Q2: 조직의 역량과 성과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인프라, 관리 및 재무를 포함한 조직 역량을 명시적으로 측정하고, 가능한 경우 이러한 역량을 성과목표 및 평가와 연계할 것을 권장함
 -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일관되게 성과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 Q3: 상황과 조직 성과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고유한 상황을 반영하는 성과 기준을 선택하고, 전략 계획을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라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상황별 규약을 개발할 것을 권장함
 - Q4: 상황, 역량 및 성과의 관계를 관리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공공부문 조직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단순한 강조 이외에 평가 대상인 조직의 고유한 특징과 조직이 운영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상황과 역량을 성과와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과 함께 공공기관의 절차를 고려하여 관리에 대한 관행의 확장이 필요함
 - 성과관리 관행과 개혁이 시행되는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측정 기준이 기존 역량 및 상황에 따른 고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참고자료

Robert K. Christensen and Tobin Im and Gregory Porumbescu, "Softening Performance's Pitfalls by Integrating Context and Capacity: A Government Competitiveness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2(5), 2022, pp. 887~892.

(요약·정리: 이은솔 연구원)



Ⅲ. 국가계약 동향



CONTENTS

1. 국내 연구 동향
2. 국외 연구 동향

Ⅲ. 국가계약 동향

1. 국내 연구 동향

- 국내 국가계약제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여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 중임
- 이에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및 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2. 7. 21.,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2. 7. 21.(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022. 7. 21.(목) 16:00~17:30, 정부세종청사 4동 국제회의실
- (참석자): ① 기재부: 제2차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② 민간업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부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본부장
③ 연구원·학계: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훈기 경희대 교수, 이창원 한양대 교수, 김한수 세종대 교수

- 이번 간담회는 업계 및 연구기관·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마련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현장 애로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음
 -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점인 저가투찰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해 온 점을 언급함
 - 다만 계약제도가 가격경쟁 위주로 운영되어 업계의 기술능력 향상 유도 등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이에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국가계약제도 역할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함
- 이에 기획재정부는 ①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②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 제고, ③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④ 계약제도 내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가계약제도를 선진화하기로 함
 -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 방안으로 국가계약제도가 민간의 투자 및 경제활동에 규제 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전문가들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 기술경쟁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아울러 기술경쟁 강화 과정에서 수주독점 등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 및 사회적 가치 강화가 과도한 기업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
- 기획재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2. 7. 21.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 2022. 8. 17.,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2022. 8. 5.(금)~8. 16.(화)까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음

〈업계 간담회 개요〉

- ▶ **1차:** 2022. 8. 5.(화) 14:00~16:00, 전문건설업체 대상
 – (참석자): 기재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등
 업계: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새암조경, 도원에프앤지, 유진컨스텍, 원일이앤씨, 다원녹화건설, 한일철도, 무강, 화성종합엔지니어링
- ▶ **2차:** 2022. 8. 9.(화) 15:30~17:30, 종합건설업체(대기업) 대상
 – (참석자): 기재부: 재정관리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등
 업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 ▶ **3차:** 2022. 8. 11.(목) 15:30~17:30, 종합건설업체(중견·중소기업) 대상
 – (참석자): 기재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등
 업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동부건설, 한양, 신한종합건설, 고덕종합건설, 대리수건설, 현도종합건설
- ▶ **4차:** 2022. 8. 16.(화) 10:30~12:30, 물품·용역업체 대상
 – (참석자): 기재부: 국고국장, 계약정책과장 등
 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한국건설ENG협회 본부장, 한국SW산업협회 실장, 진영전선, 아이엔아이, 서영ENG, 도화ENG, 드림시큐리티, 쌍용정보통신

- 이번 간담회는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 실질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역(종합·전문), 기업규모(대·중견·중소), 사업유형(공사·물품·용역)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되었음

-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에 ① 기술경쟁 강화를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② 기업부담 완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효율성 제고, ③ 안전평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한 사업현장 조성, ④ 계약제도 내 사회적가치 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위와 같은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계약제도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간담회 과정에서 업계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였음
 - 다만, 세부실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기업규모별(대·중견·중소) 입장과 사업유형별(공사·물품·용역) 특성이 적정하고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를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기술경쟁 및 안전 강화 추진 시 수주독점 문제
 -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한계와 안전관리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
 - 낙찰하한율 상향 등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관련 서류 의무적 공개
 -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보증금 국고귀속제도 개선(전액귀속→실손귀속) 등

-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간담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가계약제도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것임
 - 향후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선진화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혁신경제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임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 개최 결과」, 2022. 8. 17.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2. 국외 동향

장기조달계약(MULTI YEAR PROCUREMENT):

예산 의사결정에 보다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 제시

- 2022. 8, 美 정부책임처(GAO) -

〈보고서 추천 배경〉

- ◆ 미국 의회는 예산 성과관리에 있어 ‘multi-year procurement’라는 장기조달계약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표와 프로세스를 통해 추적 관리하고 있음을 본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음
- ◆ 대표적으로 장기조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체결 물량과 예산 요구 물량이 상이한 상황을 식별하고, 장기계속계약 체결과 차기 회계연도 예산요구 증감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
- ◆ 이러한 문제는 장기조달계약 해지와 불필요한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계속계약 체결 전, 사전 법적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시스템과 이후 승인 및 예산 책정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 미국의 장기조달계약은 낙찰 시점 첫 회계연도 이후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계약에서 1년 이상 및 최대 5년까지의 프로그램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하는 특별한 계약방법임

- 장기조달계약의 목적은 단기 계약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공급자로부터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달 및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정부 비용을 절약하는 것임
- 하지만 장기조달계약은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지만, (예산)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계약이 조기에 취소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위험을 포함할 수 있음을 발견함
 - 즉, 장기조달계약은 행정부와 의회에 예산 유연성 문제를 야기함

■ 국내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이라는 유사 제도가 존재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거버넌스와 연결되어 있음

●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 2.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 ③ 장기물품제조등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구축사업과 함께 해당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포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및 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제조 등의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⑤ 계속비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와 연차별공사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 「국가계약법」과 「국가재정법」에 관한 상세 규정(행정규칙)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있음

- 이번에 소개할 GAO의 장기조달계약 보고서는 ① 2021 및 2022 회계연도에 장기조달계획을 이행한 정도와 ② 장기조달계약이 당기 및 차기 예산 요청에 기여하는 요소에 대해 검토하는 보고서임

- 본 보고서는 「2022년 통합세출법」에 따라 장기조달계약과 당기 및 차기 회계연도 예산요청에 대한 거버넌스를 검토하는 조항에 의해 작성됨

- 해군 예산 프로그램이 2021 및 2022 회계연도에 장기조달계획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① 법적 요구사항과 ② 국방부 및 해군 규정, 정책, 지침 및 장기조달과 관련된 보고를 검토하였음

- 그 밖에 장기계약에 대한 의회 승인 및 장기조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에 대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함

1. 법적 요구사항

- 미국 법전에는 국방 무기체계와 같은 국방부의 자산 취득에 있어 장기조달계약 권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 안정적인 요구사항, 안정적인 자금조달, 안정적인 설계, 현실적인 비용 추정 및 국가 안보를 포함한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이 있음

〈표 1〉 장기조달 계약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

상당한 비용 절감	단일회계연도 계약사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총비용과 비교할 때 장기계속계약이 상당한 비용 절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안정적 요구사항	자산 취득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은 예상 계약 기간 동안의 생산진행률, 조달진행률 및 총수량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어야 함
안정적 자금조달	예정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취소를 피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필요한 수준에서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음
안정적 설계	취득할 재산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가 있고, 그러한 항목과 관련된 기술적 위험이 과도하지 않음
현실적인 비용 추정	계약비용과 장기계속계약 사용을 통한 예상 비용 회피에 대한 추정치가 현실적임
국가 안보	미합중국의 국가 안보는 이러한 계약의 사용을 통해 증진될 것임

자료: 미국 법전 제10편 군대 제3501조에 대한 GAO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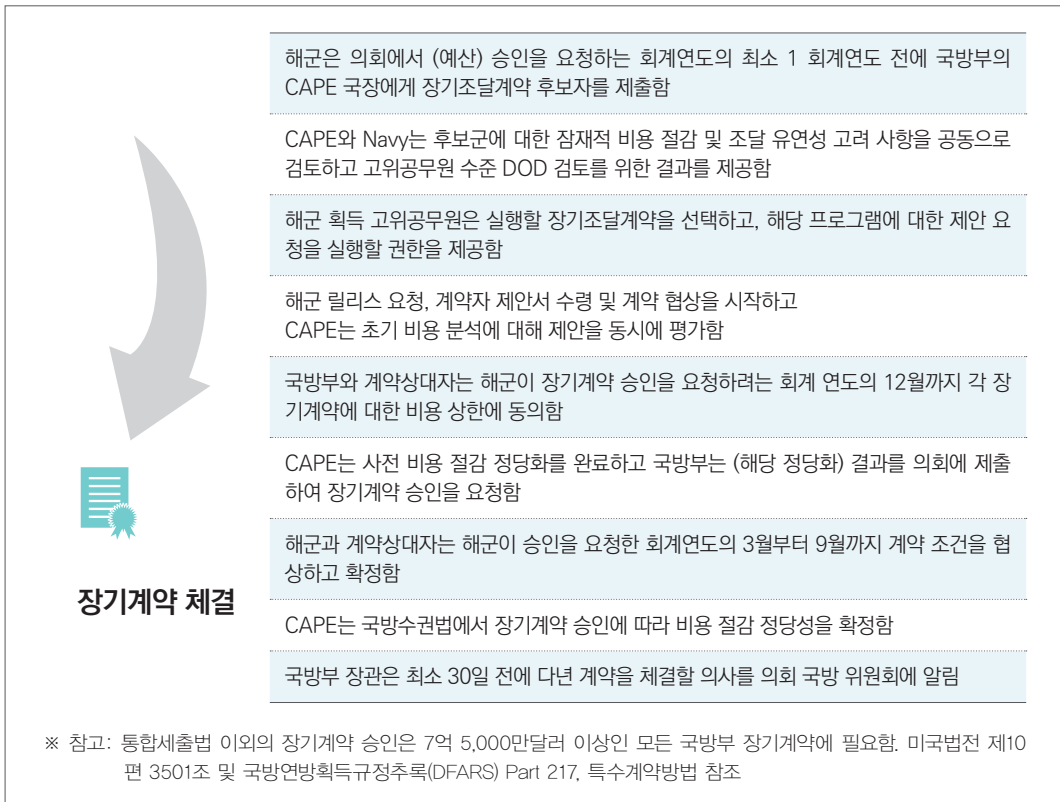
2. 예산 편성 및 승인 프로세스

- 해군은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조달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장기조달계약을 수행할 프로그램 후보를 식별함
 - 국방부의 재정관리규정은 예산연도에 장기조달 권한을 사용할 모든 후보 사업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하는 예산 증거 제출 요건을 설명함
 - 장기조달계약 후보군에는 장기조달계약 권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 전체 프로그램 및 계약 자금 조달, 장기조달계약의 현재가치 분석이 포함됨
 - 장기조달계약 후보군은 장기조달을 통해 조달될 제안된 수량을 반영하며, 이는 국방부가 장기 계약 계획을 인증하고, 계획된 계약 낙찰을 의회에 통보하기 전에 변경될 수 있음

- 7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장기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방부는 연간 국방부 세출예산법과 다른 하나의 비세출법(일반적으로 국방수권법)을 통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세출법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1) 장기조달계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건과 그러한 결과의 근거를 다루는 기관장의 예비 조사 결과가 포함된 보고서
 - (2) 상기 예비 조사 결과가 CAPE에서 수행한 사전 비용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었음을 인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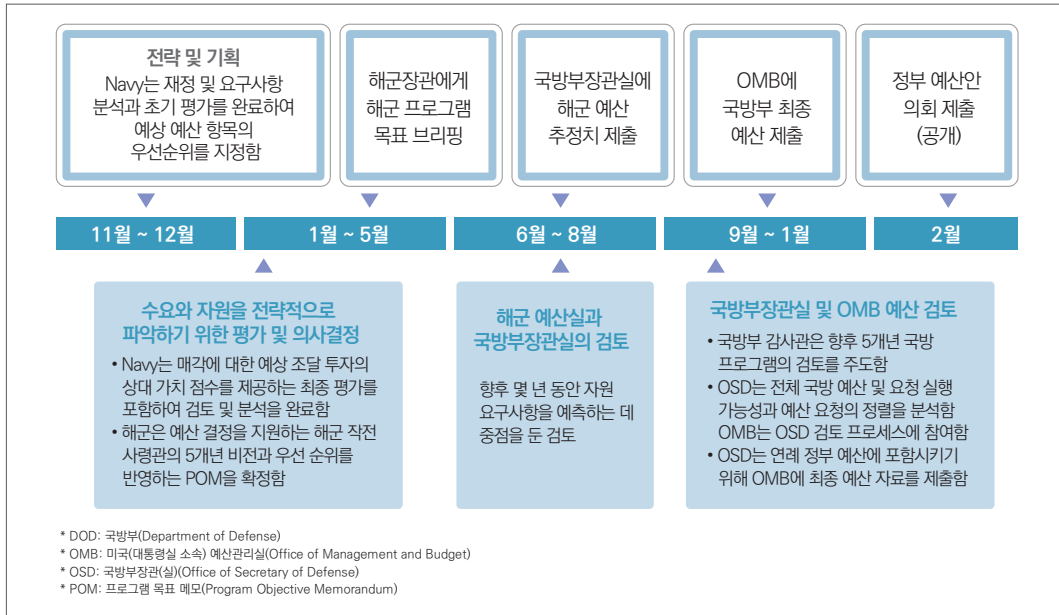
- [그림 1]은 CAPE의 지침에 설명된 대로 해군 무기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다년간 조달 승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줌

[그림 1] 해군 무기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조달계약 승인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비용추정 및 프로그램평가(CAPE) 프로세스



- 연례 자원할당을 위한 국방부의 계획 및 예산 편성 프로세스는 장기조달계약 및 단일 회계연도 조달계약에 적용됨
- 해군은 프로그램 목표 메모의 개발과 전체 국방부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국방부장관실에 대한 후속 예산 추계 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의 반복적인 결정 프로세스를 사용함([그림 2] 참조)

[그림 2] 해군의 일반적인 기획, 프로그래밍, 예산 편성 프로세스



■ 해군의 프로세스에는 조달된 자산이 전략적·작전적 관점에서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설명하는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목표 행정명령(메모, Memorandum²⁰)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

- 이 프로세스는 수요기관의 전체 능력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부, 역량이 주요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여부, 조달이 보다 즉각적이거나 장기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조달을 위해 고려 중인 능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됨
- 상대 점수는 해군이 모든 수준의 지휘부에서 반복적인 토론을 완료하는 우선순위 지정 시작 점을 제공함
- 이러한 논의에 따라 해군은 상대적 가치 우선순위를 사용하여 국방부장관실로부터 받은 최고 예산 범위에 맞는 최종 자원 결정을 내림

3. 사례 분석

■ 수요기관(해군)의 정보 검토를 기반으로 GAO는 2021 및 2022 회계연도 중 하나 또는 둘 모두

20)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미국 법령체계 참고, 4. 대통령 입법(Presidential Actions) 중 대통령 메모(Executive Memorandum)는 행정명령과 유사하나, 주로 행정부 내부 업무 지시용으로 발표되며, 관보에는 게재하나, 행정명령이나 포고령과 같은 일련번호는 부여되지 않는다고 기술하여 행정명령으로 소개하였음

에 장기조달계약이 존재하는 총 7개의 예산 프로그램 사업을 확인하였음

- DDG 51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사업
- E-2D 호크아이 항공기 사업
-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 사업
- KC-130J 헤라클레스 항공기 사업
- SM-6 표준 미사일 사업
- SSN 774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사업
- V-22 오스프리 항공기 사업

■ GAO는 상기의 성과 감사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부 감사 기준에 따라 2022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수행했음

■ 상기 프로그램 분석을 위해 연례 정부 예산 요청 및 계약 문서를 분석했음

- 상기 분석은 예산 요청에 포함되고, 장기계약에 필요한 예산 프로그램 조달 수량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지원함
- 장기계약에 명시된 요구보다 적은 수량을 포함하는 예산 요청을 확인한 경우, 수요기관 관계자를 인터뷰 하거나 서면 답변을 받았음

■ 수요기관의 예산 요청 및 장기조달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수요기관(해군)의 품질 보증 관행 및 과제에 대한 내부 통제 표준의 관련성 또한 평가하였음

- 이에 정부책임처(GAO)는 목표달성 및 위험관리를 지원하는 개방적이고 양방향 보고체계를 지향하는 기본 원칙을 포함하여, 연방 내부통제표준의 의사소통 원칙이 이 목표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장기계약 체결 후, 명시된 계약 수량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2021~2022년 회계연도 사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계약체결-예산 요청의 불일치에 기여하는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GAO는 관련 수요기관(해군 및 국방부) 관계자를 인터뷰 하거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수령함

- 7개의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3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요청이 장기계약 또는 이전의 수요 계획과 비교할 때, 수량 감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함
 - GAO는 이러한 수량 감소를 정부의 수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의회의 노력에 방해가 되었다는 평가를 함

■ 세부 평가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DDG 51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사업
 -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요청에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두척의 선박 중 하나만을 조달하기 위한 예산 요청이 확인되었음
 - 해군은 두 번째 선박에 대한 자금을 요청하는 대신 2022 회계연도에 한척의 선박으로 조달을 줄이는 정부의 계약취소 최고한도 책임을 충당하기 위해 3,300만달러를 요청함

- V-22 오스프리 항공기 조달사업
 - 2022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요청에는 해당 예산연도에 총 11대의 항공기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 요구는 8대만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음
 - 해군은 장기계약에 따른 수량보다 적은 예산을 요구하였지만, 실제로 조달된 수량은 최초 계약수량을 상회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 SSN 774 버지니아급 잠수함
 - 2021 회계연도의 예산 요청에는 잠수함 1척에 대한 예산요구가 포함되었음
 - 이는 장기계약 수량을 충족했지만 이전의 장기조달 계획, 매년 2척의 잠수함을 조달하는 꾸준한 관행 및 의회 지시에서 벗어남을 확인함

〈표 2〉 2021~2022 회계연도 장기계약을 사용하는 해군 무기체계 프로그램의 조달 수량

프로그램	장기계약기간 (회계연도)	장기계약 수량	정부 예산 요구량	조달된 실제 수량
DDG 51 구축함	'18 ~ '22	2021: 2 2022: 2	2021: 2 2022: 1	2021: 2 2022: 2
E-2D 항공기	'19 ~ '23	2021: 4 2022: 5	2021: 4 2022: 5	2021: 5 2022: 5
FA-18E/F 슈퍼호넷 항공기	'19 ~ '21	2021: 24	2021: 24	2021: 24
KC-130J 항공기	'19 ~ '23	2021: 5 2022: 5	2021: 5 2022: 6	2021: 5 2022: 6
SM-6 Standard missile	'19 ~ '23	2021: 125 2022: 125	2021: 125 2022: 125	2021: 125 2022: 125
SSN 774 버지니아급 공격잠수함	'19 ~ '23	2021: 1 2022: 2	2021: 1 2022: 2	2021: 2 2022: 2
V-22 오스프레이 항공기	'18 ~ '22	2021: 9 2022: 11	2021: 9 2022: 8	2021: 13 2022: 12

자료: 정부책임처의 국방부 정보 분석. | GAO-22-105966

- 해군 관계자는 GAO에 2022 회계연도 예산에서 DDG 51 구축함 및 V-22 항공기에 대해 요청된 수량 감소로 이어지는 주요 동인이 여유 능력(affordability)이라고 답변함
 - 그러나 GAO는 국방부의 재정 관리 규정이 장기계약에 명시된 조달 수량을 지원하지 않는 예산 결정에 대한 근거를 소요군(해군)이 의회 국방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이러한 통보가 없으면 (국방)위원회가 소요군(해군)에 추가 정보와 설명을 요청하지 않고도 감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찾아냄
- 해군은 DDG 51 구축함, V-22 항공기 및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수량을 국방 위원회에 자금이 없는 우선순위 (사업)목록에 포함시켜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회가 궁극적으로 추가 수량 조달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4. 결론

- 의회에서는 정부의 예산 요구(안)이 장기조달계약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함
 - 이 경우 의회는 예산 요구원안에 대해 승인할지, 상쇄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상충관계에 직면함
 - 항공기 조달사업의 사례와 같이 국방부의 예산 요구 원안의 수락은 장기조달의 일부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정부 요구사항에 대한 부족에 기여할 수 있음
 - 대조적으로 의회가 장기조달계약을 취소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행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변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임
- 수요기관이 장기조달을 계약 수량 이하로 줄이기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결정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해 의회 소관위원회에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의회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통지 부족은 의회 소관위원회의 감독과 수요기관의 추가 정보 및 설명을 요청하지 않고도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리는 의회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음

참고자료

- US GAO-22-105966, “Multiyear Procurement, Navy Should Provide Congress More Complete Information on Budget Request Decisions”, 2022. 8.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 10편 군대(제2320조-제2322a조)」, https://world.moleg.go.kr/web/wli/lgsInfoReadPage.do?A=A&searchType=all&searchPageRowCnt=10&C_TS_SEQ=48578&AST_SEQ=313&searchNtnl=&searchLgslCode=, 검색일자: 2022. 11. 10.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법령체계,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US, 검색일자: 2022. 11. 1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1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조문체계,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system.do, 검색일자: 2022. 8. 24.
- 법제처 지식창고, 「미국의 법령제정과정과 입법기술④」,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6962, 검색일자: 2022. 12. 1.

(작성자: 이형석 연구원)

랜독스 연구소와 정부 계약에 관한 조사

- 2022. 3., 영국 감사원(NAO) -

〈보고서 추천 배경〉

- ◆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 기업 랜독스 연구소(Randox Laboratories Ltd)와 PCR 검사 서비스 등을 위한 조달 계약을 체결함
- ◆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정부 계약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약 조건, 이행 및 성과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사항을 권고함

-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영국 정부는 대규모 코로나19 검사²¹⁾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랜독스 연구소(Randox Laboratories Ltd, 이하 랜독스²²⁾)와 수익계약을 체결함
 - 영국은 2015년 공공계약 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에 따라 국가 긴급 상황에서 공고나 경쟁 절차 없이 조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랜독스 연구소와의 계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계약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세한 조사가 수행됨
- 이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계약을 수주 및 관리한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Social Care)의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랜독스 연구소에 낙찰된 모든 계약을 살펴봄
 - 이를 통해 긴급 조달 과정 중에도 투명성 및 의사결정 보장을 위한 적절한 감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선사항을 권고함

I. 정부 조달 및 PCR 검사

- 영국의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국민 건강 보험(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 기관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2015년 공공계약규정(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15,

21) PCR 검사를 의미함

22) 랜독스 연구소(Randox Laboratories Ltd)는 임상시험, 병원 및 실험실용 솔루션 개발, 실험실 의학용 시약 및 장비 공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글로벌 기업임(출처: Investigation into the government's contracts with Randox Laboratories Ltd, p. 5)

이하 공공계약규정에 따라 공공조달을 수행함

- 공공계약규정은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 조달 계약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간 및 절차를 준수하고 공개 입찰을 수행하도록 장려함
 -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개 입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변경 및 낙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아래의 <표 1>은 긴급 조달, 기존 계약 변경 및 수정, 조달 절차 문서화 등을 포함한 공공 계약규정의 주요 요소를 정리함

<표 1> 2015년 공공계약규정의 주요 요소

규정	분야	세부 내용
24	이해 상충	수여기관(awarding body)은 조달 절차 수행 중 발생하는 이해 상충을 효과적으로 방지 및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32	사전 공고 없는 협상 절차 사용	규정 32(2)(c)조는 공공기관이 다음의 상황에 대해 사전 공고 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유가 있는 긴급한 상황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상황 일반적인 시간 기준 준수 불가능
72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의 변경 및 수정	본 조항은 공공기관이 특정 상황에서 새로운 조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함. 변경은 계약의 전반적인 성격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금액의 증가는 최초 계약의 50%를 초과하지 않음
84	보고 및 문서화	수여기관(awarding body)은 모든 조달 절차의 진행 상황을 문서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자료: NAO, Investigation into the Government's Contracts with Randox Laboratories Ltd, 2022, p. 15, Figure 1, 재인용

-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국 정부의 공공조달은 예외적인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짐
 - 2020년 3월 이후, 영국 정부는 몇 달 동안 긴급 조달 규정(emergency procurement regulations)을 통해 수십억파운드의 정부 계약을 승인함
 - 정부는 긴급 조달 절차에 따라 대량의 물품 및 서비스를 신속히 조달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함
- 특히 코로나19 검사는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PCR 검사의 개발은 전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핵심 부분이었음
 - 2020년 초, PCR 검사는 NHS,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 이하 PHE) 및 민간 부문 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용량의 검사 역량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음
 - 따라서 2020년 3월부터 보건사회복지부는 검사 용량을 확대하며 새로운 NHS 검사 및 추

- 적 서비스(NHS Test and Trace Service, 이하 NHST&T)를 시작함
- 2020년 12월 발간한 NHST&T에 대한 영국 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에서 정부는 PCR 검사를 크게 확대하고 국가 추적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힘
 - 보고서에 따르면 NHST&T는 공급,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 상당 부분 계약업체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보건사회복지부는 2021년 3월 말까지 NHST&T와 관련된 활동에 대해 454개의 공급업체와 964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남
 - 총계약 금액 141억파운드 중 PCR 검사 계약은 127억파운드에 달했으며 랜독스는 당시 계약 금액 면에서 5번째로 큰 공급업체였음

1. 랜독스와 보건사회복지부의 계약

- 2018년 2월, 랜독스는 큐노스틱스(Qnostics Ltd, 이하 큐노스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함
 -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건사회복지부와 PHE는 랜독스 및 큐노스틱스와 7억 7,690만파운드에 달하는 계약 22건을 체결함
 - 총금액 7억 7,000만 파운드의 PCR 검사 서비스 제공 계약 10건 중 8건은 PCR 검사 키트 제공 및 분석을 위한 것이고, 2건은 바이러스 분석을 위해 샘플을 추가로 검사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이었음
 - 그 외 총 690만파운드의 PCR 검사 제품 제공 계약 12건이 있음
 - 보건사회복지부는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의계약(총계약의 약 60%), 개정된 계약(총계약의 약 25%) 및 프레임워크 계약(총계약의 약 15%)을 사용함

2. 계약 금액 관리

- NHST&T가 설립되기 전인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건사회복지부는 검사 및 추적 계약(test and trace contracts) 절차에 보건사회복지부의 사무차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계약 금액이 1억 5,000만파운드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힘
 - 아래의 <표 2>는 2020년 5월, NHST&T가 도입된 후 PCR 검사 및 추적 계약(test and trace contracts)에 대한 승인 절차를 나타냄

- 재무부(HM Treasury) 및 보건사회복지부 그리고 관련 공무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에 서명하거나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표 2〉 계약 금액에 따른 NHST&T 승인 주체 및 절차

계약 금액	승인 주체
200만파운드 이하	NHST&T 내의 예산 소유자, 금융 비즈니스 파트너 및 상업적 주도권자
200만파운드 이상 2,500만파운드 이하	검사 및 추적 승인 위원회(Test and Trace Approval Board)
2,500만파운드 이상	검사 및 추적 투자 위원회(Test and Trace Investment Board), 내각부(Cabinet Office), 재무부(HM Treasury) 및 행정부
1억 5,000만파운드 이상	내각부(Cabinet Office), 재무부(HM Treasury) 및 보건사회복지부 투자 위원회(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 Investment Committee)의 추가 승인

자료: NAO, Investigation into the Government's Contracts with Randox Laboratories Ltd, 2022, p. 26, Figure 5, 재인용

3. 계약 세부사항 발표

- 계약 세부사항의 발표를 통한 투명성 제고는 정부 조달의 기본이며 이는 계약이 경쟁 입찰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특히 더 중요함
 - 긴급 상황에서의 조달일지라도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여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공기관은 공공계약규정에 따라 12만 2,976파운드 이상의 조달에 대한 공지를 30일 이내에 게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
 - 이는 다른 공급업체가 계약 낙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 외의 불공평함을 방지하기 위함임
 - 그러나 랜독스 또는 큐노스틱스에 낙찰된 프레임워크 계약의 대부분은 30일 이내에 낙찰 공지가 게시되지 않았음
 - 그 후로 보건사회복지부는 정부의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힘

II. 랜독스와의 첫 번째 계약 및 낙찰

1. 랜독스의 첫 번째 계약 낙찰 및 절차

- 2020년 1월부터 보건사회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 공급업체를 찾기 시작함
 -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랜독스의 제안서는 다른 공급업체들의 제안서와 함께 검토되었으며

PHE는 검토 끝에 랜독스의 코로나19 검사 제안서를 승인함

- 2020년 3월, 랜독스가 하루에 제공할 수 있는 검사 수, 검사당 비용 및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을 의논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보건사회복지부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승인 요청을 내림
 - 건당 49파운드 60펜스의 검사 키트 최소 270만개(총 1억 3,300만파운드) 주문
 - 보증금으로 5,000만파운드 지급
 - 선불 500만파운드 지급

■ 2020년 3월 30일, 보건사회복지부는 랜독스와 PCR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1억 3,240만파운드의 계약을 체결함

- 이는 2020년 3월 말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12주의 기간 동안 266만 9,100건의 검사 제공을 기준으로 했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됨
- 계약 금액이 랜독스의 연간 매출보다 크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보건사회복지부는 총 5,500만파운드를 선불로 지급함

2. 랜독스의 계약 이행 및 성과

■ 계약 이행을 위해 랜독스는 PCR 검사 키트 납품을 위해 새로운 포장, 새로운 생산 라인 구축 등을 포함해 추가 실험실 공간 및 기타 설치비용에 7,000만파운드를 지출함

- 특히 계약 이행 단계 초기인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CR 검사 제공 추가 용량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이는 추가적인 전문 장비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랜독스는 2020년 4월 정부 회의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총 185개의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었음
- 2020년 6월 초까지 랜독스는 검사 용량을 하루 3만건으로 늘릴 수 있었지만, 당초 예상보다 낮은 시스템 수요와 물류 문제로 인한 신속한 샘플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하루 검사 용량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음
- 보건사회복지부와 랜독스는 계약에 명시된 검사 용량을 납품하기 위해 당초 6월 종료 예정이었던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함
 - 2020년 9월 26일, 랜독스의 검사 용량은 하루 5만건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9월 26일, 랜독스와 보건사회복지부는 약 270만건의 검사 제공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이행 성과 측정에 대해서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를 측정하지 않았음

- 그러나 NHST&T는 2020년 7월부터 요양원 등의 기관에서 보낸 PCR 검사 소요시간(면봉 수집 및 결과 도출 시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함
 - 목표는 48시간 안에 60%의 검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었고,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각 기관에서 보낸 228만 5,000개의 검사 키트 중 14%가 48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가 통보됨
 - 검사 결과 소요시간은 낮은 샘플 예측 정확도 및 절차, 택배의 배송 효율성 및 운송 시간과 같은 여러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랜독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NHST&T와 협력함

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장관급 회의

-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민간 회사들과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PCR 검사 개발, 서비스 제공 및 공급업체 협력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함
 - 국무장관과 랜독스 사이의 연락은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내각부와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이하 ICO)는 이에 대한 지침을 발표함
 - 내각부 지침은 “사적인 연락망을 통해 정부 사업 수행을 토론했고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가 공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함
 - ICO는 사적인 연락망을 통한 의사결정은 공식적인 기록을 보존하지 못하는 단점 등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공공 당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함
- 영국 정부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장관과 랜독스가 참여한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총 네 번의 회의를 외부 기관과의 분기별 장관 회의에서 보고함
 - 이 중 세 번의 회의는 다른 공급업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였으며, 한 번의 회의는 생명과학부 장관(Minister for Life Sciences), 랜독스 및 자문위원, 공무원들 간의 전화통화였음

나. 계약 결정 문서화

- 랜독스의 첫 번째 계약에 대해 정부는 조달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주요 증거 및 문서를 요청함
 - 보건사회복지부의 시스템에 문서가 저장되지 않아 주요 정부 관계자들의 개인 이메일 계정을 검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실사보고서 및 계약 협상 등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불충분했음
 -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감사원은 정부 조달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견함

- 이에 따라 보건사회복지부는 계약 금액이 재무부의 위임 지출 한도인 1억 5,000만파운드 미만이었기 때문에 재무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재무부와 공유했다는 증거를 제공함
 - 보건사회복지부와 내각부는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힘

Ⅲ. 랜독스의 후속 계약

- 제3장에서는 랜독스의 첫 번째 계약인 1억 3,240만파운드의 계약에 대한 3억 2,830만파운드의 변경사항을 다루며, 이는 PCR 검사 서비스 및 제품, 비용 및 성과를 포함함

1. PCR 검사 서비스 후속 계약

가. 계약 변경 및 추가 검사 서비스 계약

- 2020년 10월 2일, 보건사회복지부는 랜독스의 첫 번째 검사 계약에 대해 3억 2,830만파운드의 변경사항을 직접 승인함
 - 이는 기존 계약 금액의 거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으며 보건사회복지부는 이러한 조치가 랜독스의 검사 역량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고 밝힘
 - 계약 변동은 검사 용량의 활용에 대한 메커니즘, 랜독스의 부채 등 총 3가지의 변경사항을 포함함
 - 계약 변동 이전에 내각부는 보건사회복지부에 낮은 금액으로 협상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보건사회복지부와 랜독스는 2020년 9월 검사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함
 - 랜독스의 첫 번째 계약에서 자본 투자가 충당되고 대량 구매가 증가하여 제조 및 절차 관리 시스템이 개선됨
 -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인하된 가격은 2020년 10월 계약 변동에 적용됨
 - 2021년 2월, 보건사회복지부는 랜독스와 합의한 가격에 대한 계약 문서(contract overview document)를 준비함
 - 문서는 2020년 10월 2일 이후 랜독스와 합의한 가격은 기존 계약의 가격에 비해 상당한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명시함
 - 검사 가격은 건당 49파운드 60펜스로 보건사회복지부는 총 1억 2,840만파운드를 지불함

나. 성과 및 계약 관리

- 2021년 10월 18일까지 보건사회복지부는 추가 서비스를 포함하여 검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랜독스에 4억 330만파운드를 지불함
 - 2021년 1월, 랜독스는 최대 계약 용량에 도달했지만 이는 다른 실험실의 검사 역량이 발전되고 시험 용량이 균등하게 분배됨에 따라 2021년 4월과 5월에 감소됨
 - 결과적으로 랜독스는 2021년 12월 16일까지 1,600만건 이상의 검사를 처리함
 - NHST&T는 랜독스와 매일 그리고 매주 통화를 통해 계약의 성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성과 지표는 PCR 검사 결과 소요시간 및 무효로 반환된 결과의 비율 등을 포함함
 - 첫 번째 계약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는 PCR 검사의 14%가 48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계약 변동 이후 2020년 10월 2일부터 2021년 12월 7일 사이에는 비율이 62%로 개선되었음
 - 랜독스 실험실에서 무효로 반환된 PCR 검사 비율은 2020년 2.5%였지만, 2021년 2.1%로 개선됨
 - 정부와 PCR 검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다른 실험실의 경우 평균 무효율이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2.5%였음

다. 코로나19 검사 물품에 대한 계약

-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보건사회복지부, PHE 그리고 UKHSA는 코로나19 검사 물품 제공을 위해 랜독스와 큐노스틱스에게 12건의 계약 및 계약 변동을 낙찰했으며, 총금액은 690만파운드에 달함
 - 2021년 12월까지 보건사회복지부는 2021년 12월 이전에 체결된 검사 물품에 대한 계약 금액(410만파운드)을 모두 지급했고, 계약된 물품 또한 모두 납품됨
 - UKHSA는 10만파운드 미만의 계약은 일회성 조달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힘
 - 10만파운드 이상인 계약의 경우 NHST&T는 계약 진행 및 성과에 대해 큐노스틱스와 매주 논의했지만 계약서에 핵심 성과지표를 명시하진 않음
 - 또한 물품 계약에 대해 랜독스가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없으며 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시함

IV. 결론

-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검사 용량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함
 - 공공계약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없는 긴급 조달 절차를 사용했지만 보건사회복지부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문서화하지 않았고, 장관 회의 및 회의록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랜독스와 체결한 계약이 부적절하게 낙찰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음

- 그러나 감사원의 이전 보고서에 따라 긴급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의 투명성, 책임성 및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감사가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함
 -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권고사항 중 일부를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감사원은 계속해서 진행 상황을 추적할 예정임

참고자료

NAO, Investigation into the government's contracts with Randox Laboratories Ltd, 2022, <https://www.nao.org.uk/reports/investigation-into-the-governments-contracts-with-randox-laboratories-ltd/>, 검색일자: 2022. 10. 4.

(작성자: 이아름 연구원)



주요국의 재정성과정보 DB 현황



제2부

1. 미국
2. 캐나다

주요국의 재정성과정보 DB 현황

1. 미국

1. 성과관리 제도 개요

가. 연혁 및 변천

- 1993년 연간 성과 계획 및 보고서를 포함한 전략적 기획을 중심으로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이 도입됨²³⁾
 - 2010년에는 이를 「정부성과결과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 이하 GPRAMA)」으로 개정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연구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합하고자 함
 - GPRAMA는 조직 전략 계획, 우선순위목표 설정, 결과에 대한 보고에 초점을 맞춘 법적 체계를 만들어 연방 기관을 위한 핵심 조직성과 및 관리 관행을 마련함
 - 또한 수년에 걸쳐 관련 입법 요건을 도입하고 관리 이니셔티브(예: 고객 경험, 기업 위험 관리)를 통합함
 - 관련 입법 요건으로는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프로그램 관리 개선 및 책임 이행법(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이 있음
-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는 2016년 「프로그램 관리 개선 및 책임 이행법(Program Management Improvement Accountability Act of 2016, PMIAA)」을 제정하여 특정 연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를 증진시키고자 함²⁴⁾
 -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범정부 표준, 정책 및 지침을 개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연방정부 내에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관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23) 미국 재무부,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2/03/ap_5_delivering_fy2023.pdf

24) 양승우(2021) 참고

- 2019년 1월에는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이하 증거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은 정부기관들에 증거구축 능력의 향상, 데이터 접근가능성 제고,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었음²⁵⁾
 - 특히 증거법은 사후분석(evaluation)²⁶⁾을 정부기관의 중요한 기능이자 임무의 하나로 격상 시킴
 - 이 법률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정책수립과 사후분석에 사용할 증거를 구축할 의무, 그리고 성과 계획과 연동하여 사후분석 계획을 작성·발표할 의무를 부여함

나. 법제화

- 미 행정부는 연방성과체계를 위해 1993년 「정부업무수행성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GPRA)」을 도입하고, 2010년 이를 「정부성과결과 현대화법(GPRA Modernization Act, GPRAMA)」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4년 단위 전략계획 수립으로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2년 단위 연간 성과목표와 전략목표 간의 연계성을 확보함
 - GPRAMA 제정에 따라 미국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최소 4년에 한번 ‘범부처 우선순위(Cross-Agency Priority, CAP) 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년 안에 달성될 수 있는 단기적 목표인 ‘부처 우선 목표(Agency Priority Goal, APG)’를 수립해야 함
 - 중장기 전략과 연간 성과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우선순위목표와 이에 따른 기관별 우선순위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계획 작성 및 성과목표에 대해 분기별 평가를 실시함
 -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기관별 최고운영담당관(Chief Operation Officer, COO), 성과위원회 및 성과개선 담당관을(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 PIC) 설치하고, 기관 리더십에 의한 의사결정을 위해 성과정보와 증거의 사용을 강조함
 - 성과포털(Performance.gov)을 활용한 성과보고 및 정보 공개 등 통합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 GPRAMA는 범정부적인 성과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단일의 성과포털을 만들도록 함
 - 이에 OMB는 성과포털을 개설하여 분기별로 기관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연간 성과보고

25) 김준(2021) 참고

26) 이 법률에 따르면 사후분석(evaluation)이란 “효과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1개 이상의 사업, 정책 및 단체에 대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사용하는 점검을 말한다.”(제311조(3))

서, 프로그램 목록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 대통령 관리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는 연방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로서, 정부 운영 및 수행방식 개선을 위해 모든 연방 기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우선순위를 정의함
 - PMA는 각 부처의 미션 결과 활용, 효율적 서비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각 영역을 근대화 하는 장기적인 관점을 확장

다. 주요 제도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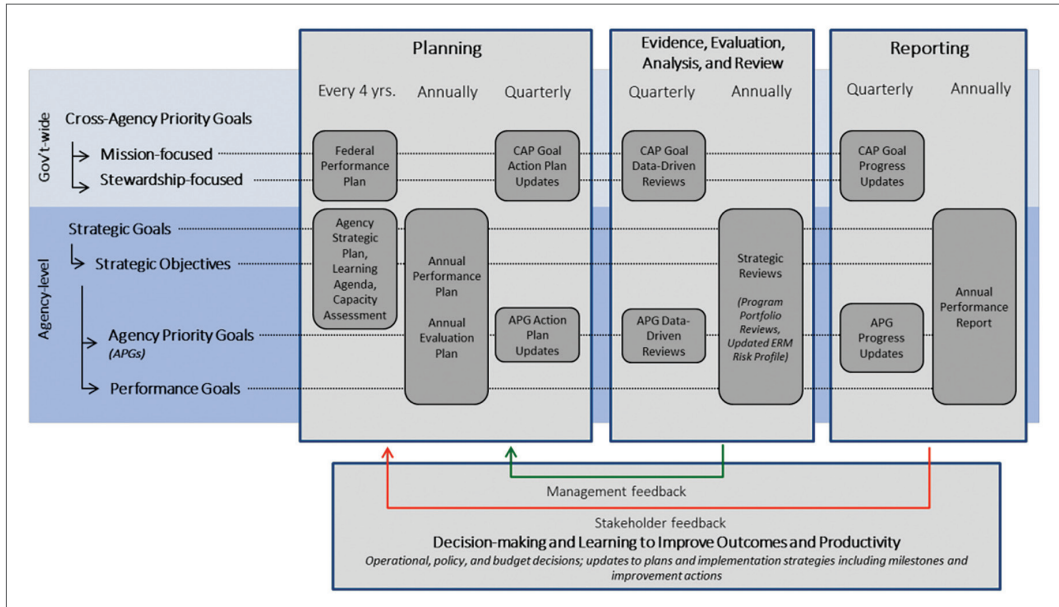
- (사업평가) 2010년부터 GPRAMA를 근거로 연방행정기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함²⁸⁾²⁹⁾
 - 연방행정기관 평가의 주체는 OMB이며, 평가 대상은 연방행정기관임
 - OMB가 연방행정기관 평가에 활용되는 평가지표 관련 기본지침을 제공하며, OMB의 기본지침에 따라 연방행정기관이 평가지표를 설정함
 - OMB가 평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면 이에 따라 각 연방행정기관이 성과목표(기관전략계획, 기관성과계획) 및 평가지표를 설정함
 - 연방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 후 기관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OMB가 부처별 재정 예산관리 정책 등을 종합평가함
 - 평가 대상은 OMB의 범부처 우선순위목표(Cross-Agency Priority Goals, CAP), 각 기관에서 2년마다 설정하는 부처 우선순위목표(Agency Priority Goals, APGs) 등에 따름
 - 각 연방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하여 분기별·연도별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성과포털에 공개함

27) 원종학·임소영(2018) 참고

28) 류영아(2018) 참고

29) 고용수 외(2018) 참고

[그림 1] GPRAMA 성과관리 주기



자료: 2022년 8월 미국 예산안 편성 지침(OMB Circular A-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 검색일자: 2022. 10. 24.

- (모니터링) GPRAMA를 근거로 개별 단위사업 또는 상위 성과목표 수준에서의 분기별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성과점검 대상과 검토 주기는 다음과 같음

<표 1> 미국의 정기적인 성과점검 체계

목표	주기	성과 검토
연방 범부처 우선순위목표 (Federal Cross-Agency Priority Goals)	매 4년	분기별 검토
부처 우선순위목표 (Agency Priority Goals)	매 2년	분기별 검토
전략적 목표 및 목적 (Strategic Goals and Objectives)	매 4년	매년 검토

자료: 원종학·임소영(2018) 및 2022년 8월 미국 예산안 편성 지침(OMB Circular A-1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 검색일자: 2022. 10. 24.

-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GPRAMA는 매 2월마다 부처별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³⁰⁾
 - 연간 기관성과계획서(Agency Performance Plan, 이하 APP)는 당기·차기 회계연도의 성과 목표치 및 구체적 달성계획을 설명하는 자료로, 이는 기관의 전략적 목표 및 목적과 일관되어야 함
 - 또한, 행정명령·OMB의 제안서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관리·정책 우선순위와 범부처 우선 순위목표(CAP)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함
 - 연간 기관성과보고서(Agency Performance Report, APR)는 이전 5 회계연도 동안 부처가 달성한 성과의 실적을 요약하는 자료로, 기관의 전략적 목표·성과목표·부처우선순위목표(APGs)에 대한 진전과 달성성과를 설명함

2. 성과DB 개요

가. 재정법과의 관계

- GPRAMA는 정부 및 연방 기관의 범정부적 성과정보 공유를 위한 단일의 성과 웹사이트를 만들도록 규정하였으며 웹사이트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³¹⁾
 - 1) 분기별 진행사항 업데이트를 포함한 범부처 우선순위목표(CAP) 및 부처우선순위목표(APGs)에 대한 정보
 - 2) 기관 전략 계획, 연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이에 OMB는 성과포털(Performance.gov)을 활용한 성과보고 및 정보 공개 등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함
 - 성과포털은 조직의 성과 및 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설계된 행정각부의 성과 및 관리 정보를 포함하는 웹 기반 시스템임
 - OMB는 성과포털을 개설하여 분기별로 기관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연간 성과보고서, 프로그램 목록 등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음

30) 2022년 8월 미국 예산안 편성 지침(OMB Circular A-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 검색일자: 2022. 10. 24.

31) 31 U.S.C. § 1122; OMB, Circular No. A-11, pt. 6, § 210.5 (2020). The federal program inventory is to be made available on Performance.gov or another appropriate federal government website where related information is made available, as determined by OMB. 31 U.S.C. § 1122(a)(2)(B)

나. 기존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 관계

- GPRAMA 제정에 따라 성과포털을 활용한 성과보고 및 정보 공개 등 통합 성과관리체계가 구축됨
 - 성과포털에는 기관 전략계획, 연간 성과계획, 연간 성과보고서, 프로그램 목록 등의 정보가 업데이트되어 연방의 모든 성과정보가 통합 관리되고 있음
- 중앙 웹사이트인 성과포털은 대중, 의회, 연방 기관 직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성과 정보를 보다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³²⁾
 - 이를 통해 연방 프로그램이 하는 일과 각 프로그램이 예산, 성과 및 기타 정보와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
 - 또한 성과포털은 행정각부의 정책 목표·관리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연방 목표 및 성과에 대한 공개 청구 역할을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
 - 관련 지표·목표·실행 계획·목표 리더·기여 프로그램 등 대통령의 관리 의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이하 PMA) 구현을 위한 범부처 우선순위목표(CAP)에 대한 설명
 - OMB 및 연방 기관의 우선순위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 업데이트(분기별)
 - 기관 전략 계획, 증거 구축 계획(예: 학습의제), 연간 성과계획, 연간 평가계획 및 연간 성과보고서
 - 행정부의 기타 주요 관리 우선순위 및 이니셔티브

다. 주요 제공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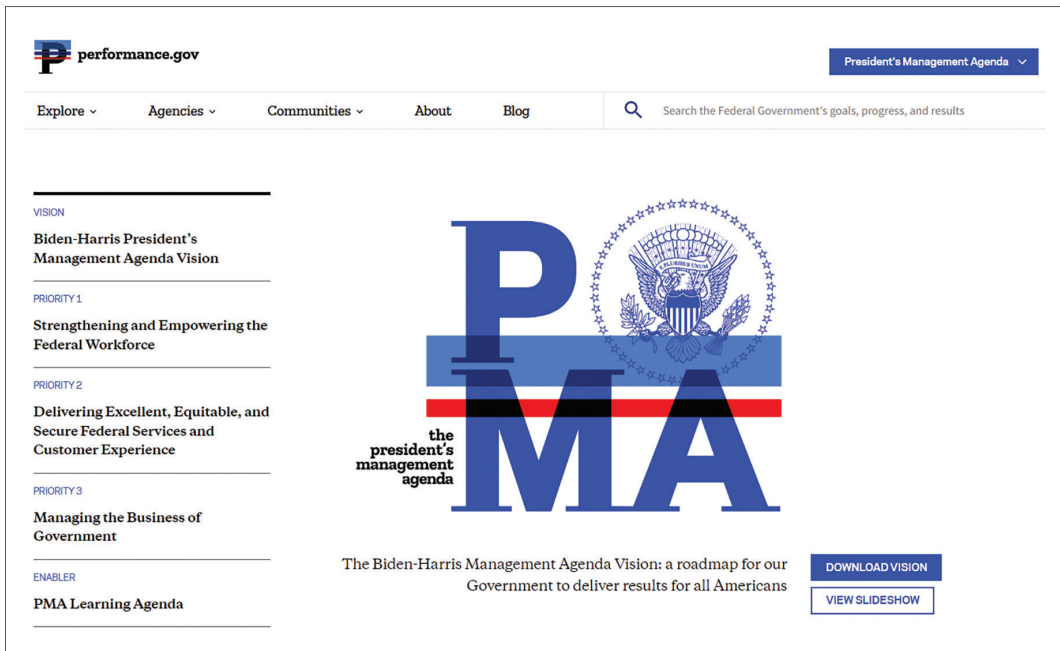
- 대중은 성과포털을 통해 PMA, 연방 성과관리체계 및 연방 목표설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연방 정부는 이러한 성과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연방 기관의 조직성과를 관리하고 PMA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음³³⁾
 - 모든 행정각부와 9개의 주요 기관들은 성과포털에 기관별 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의 페이지에는 기관 개요·사명·달성 우선순위목표·전략 및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링크가 제공됨

32) 2022년 8월 미국 예산안 편성 지침(OMB Circular A-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 검색일자: 2022. 10. 25.

33) 정부포털 홈페이지, <https://www.performance.gov/about/what-is-performance/>, 검색일자: 2022. 10. 25.

- 2022년 10월 기준 OMB는 ‘바이든-해리스 관리 의제 비전(Biden-Harris Management Agenda Vision)’에 제시된 우선순위, 전략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 기관 전략계획 및 부처우선 목표(APGs)를 성과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아래 [그림 2]와 같이 PMA 비전, PMA 작업지침의 핵심 가치, 세 가지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별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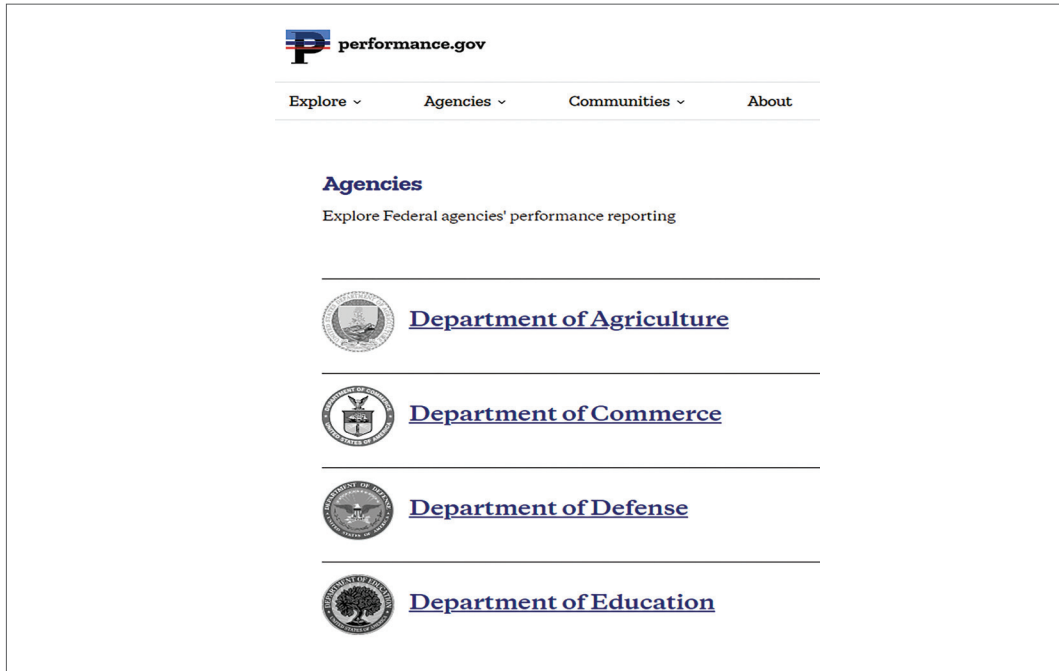
[그림 2] 성과포털의 PMA 관련 페이지



자료: 성과포털 홈페이지, <https://www.performance.gov/pma/>, 검색일자: 2022. 10. 18.

- 또한, [그림 3]과 같이 부처별 부처우선목표(APGs)를 공개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농부부의 미션, 전략목표(Strategic goals), 2개년 계획이 담긴 부처우선목표, 전략목표(STRATEGIC PLAN),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PERFORMANCE PLAN & REPORT), 학습의제(LEARNING AGENDA) 등을 공개하고 있음([그림 4] 참조)

[그림 3] 성과포털의 부처우선목표(APGs) 관련 페이지



자료: 성과포털 홈페이지, <https://www.performance.gov/agencies/>, 검색일자: 2022. 10. 18.

[그림 4] 미국 농무부의 부처우선목표(APGs) 관련 페이지



자료: 성과포털 홈페이지, <https://www.performance.gov/agencies/usda/>, 검색일자: 2022. 10. 18.

라. 운영 방식(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중심으로)³⁴⁾

- OMB는 성과포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음
 - 연방 기관이 전략적 계획, 전략적 검토 및 우선순위목표 수립·달성을 위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관 성과정보 보고를 위한 효과적·효율적이고 투명한 방법을 활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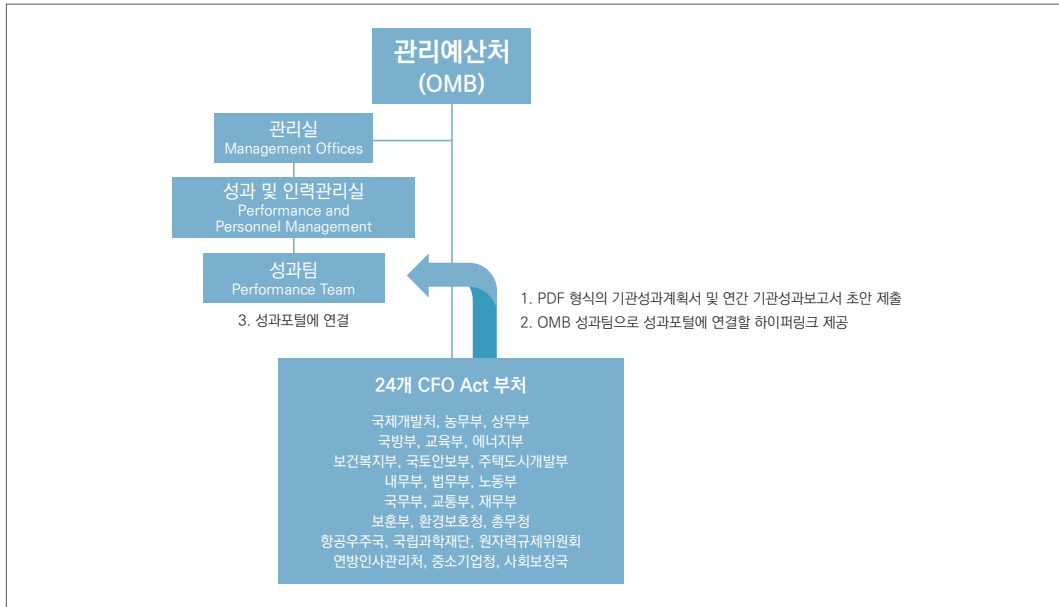
- 연방 기관은 매년 9월에 시작되는 예산 프로세스를 통해 검토, 협업 및 심의를 위한 연간 기관 성과계획서 및 연간 기관성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OMB에 제출해야 함³⁵⁾
 - 또한 연방 기관은 최종 전략 계획, 연간 기관성과계획서, 연간 평가계획 및 연간 기관성과보고서를 PDF 형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함
 - 승인 완료 이후 연방 기관은 개별 기관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계획 및 보고서를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성과개선담당관(Performance Improvement Officers, PIO) 또는 담당자는 OMB의 성과팀(Performance Team³⁶⁾)으로 성과포털에 연결할 하이퍼링크를 제공해야 함
 - 해당 하이퍼링크는 기관의 현재 및 과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게시한 공개 웹사이트로 연결됨

34) 2022년 8월 미국 예산안 편성 지침(OMB Circular A-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8/06/a11.pdf>, 검색일자: 2022. 10. 27.

35) 제출 대상 연방 기관은 24개 최고재무책임자법(Chief Financial Officers Act, CFO Act) 해당 부처로, 국제개발처,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교육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주택도시개발부, 내무부, 법무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보건부, 환경보호청, 총무청,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원자력규제위원회, 연방인사관리처, 중소기업청, 사회보장국이 포함됨

36) performance@omb.eop.gov

[그림 5] 성과포털 운영방식



자료: OMB 디렉터리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s://www.governmentattic.org/39docs/OMBdirectory_2020.pdf, 검색 일자: 2022. 10. 27.

마. 사이트맵

■ <표 2>는 성과포털의 사이트맵을 보여줌

<표 2> Performance.gov 사이트맵

Explo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gencies • Goals by Theme • Campaigns
Agen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partment of Agriculture • Department of Defense • Department of Energy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epartment of the Interior • Department of Labor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 Other Federal Agencies • Department of Commerce • Department of Education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Department of Justice • Department of State • Department of the Treasury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stomer Experience • Equity • Performance Improvement Council • White House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 Trusted Workforce 2.0 • Real Property Metrics
Ab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t Started • About Performance.gov • FAQs • Performance Framework • Key Partners
Blog	-

자료: Performance.gov 홈페이지, 검색일자: 2022. 10. 24.

참고자료

고용수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성과분석 및 고도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김준, 「사후입법영향분석의 방법과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2021.

류영아, 「주요국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8.

양승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법제 개편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원종학·임소영, 「영·미 국가들의 최근 재정성과관리 주요 이슈(2014~2017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2. 캐나다

1. 캐나다 GC Infobase³⁷⁾

가. 성과관리 제도 개요(간략히)

1) 연혁 및 변천

〈표 1〉 캐나다 성과관리 제도 요약

정책	시행년도	내용
지출관리 시스템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EMS)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출관리 시스템은 모든 프로그램이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정부의 우선순위와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됨 기존 정부 프로그램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제안은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과를 산출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침 지출관리 시스템은 크게 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지속적인 평가(Ongoing assessment), 선행 규율(Upfront discipline)을 기반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관리: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를 입증함 - 지속적인 평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프로그램 지출을 검토하여 프로그램이 효율적인지, 우선순위 및 정부 책임과 일치하는지 확인함 - 선행 규율: 정부 지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존 프로그램과 적합한지 확인함 분권화되어 있으며, 추밀원, 재무부, 재무위원회 사무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음
자원 관리 및 결과 연계 정책 (Policy on management, Resources and results structure, MRRS)	200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 보고 및 책임성 체계(Planning, Reporting and Accountability Structure, PRAS)를 개선하여 도입됨 캐나다 정부의 성과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각 정부의 사업이 정보를 체계적이고 통일된 방법으로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해 도입됨 전략적 성과(Strategic Outcome, SO)와 사업배분구조(Program Alignment Architecture, PAA)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성과(Strategic Outcome)는 부처의 임무와 비전을 반영하고 정부의 우선순위 및 결과와 연관이 있으며, 부처별로 타부서와 차별화 되는 1개에서 4개의 전략목표가 설정됨 - 사업배분구조(Program Alignment Architecture)는 전략목표와 연결되는 사업별 분류체계로,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구조를 가짐
관리 책무성 모형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MAF)	20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위원회 비서실(TBS)에서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성과관리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부처평가 또한 관리 책무성 모형을 통해 이루어짐 관리 책무성 모형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의 개선을 위해 강점과 개선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여 기관장에게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지원함 - 재무위원회 비서실에 부처 정책의 진행 상황을 알림 - 범정부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 - 성과 및 우선순위에 대한 진행 상황의 이해를 도움

자료: Government of Canada(2022), 원종학 외(2018), 공동성 외(2013), 노영래(2019)

37)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start>

2) 법제화

- 2006년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연방회계법(Federal Accountability Act)」이 제정되면서 주기적인 평가가 의무화 됨

3) 주관기관

■ 재무위원회 비서실(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각 부처는 부처 내 감사부서를 통해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에 대한 MRRS, MAF, ERP 등의 평가 결과를 TBS에 제공함
 - 개별 부처의 성과를 파악해 부처 내 자원의 배분을 결정
 - 연방정부 차원의 관리 현황 및 개선 과제를 파악
 - 정책 순응과 집행 정도를 모니터링
 - 범정부적 관리의 중점 사항과 발전 계획의 진전 사항을 점검함
- * 문의사항: questions@tbs-sct.gc.ca

4) 주요 제도

■ 사업평가: 정기적, 비정기적(evaluation policy)

- 캐나다의 사업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부처평가와 5년 단위의 메타평가로 나눌 수 있음
- 부처평가: 관리 책무성 모형(MAF)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함
- 메타평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적 컨설팅 기업(Princewaterhouse Coopers LLP)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MAF 평가의 관련성(Relevance), 결과성(success),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 측면에서 이루어짐
- 부처 평가역량 진단(neutral assessment): 평가역량 제고를 위해 5년에 한 번 자체평가를 실시해야하며, 각 부처의 차관은 정책평가 지침서를 확인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님

■ 모니터링

- 중앙부처 차원의 연중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지 않지만, 매년 의회에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재무보고서 형식의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 부처별 성과계획서는 각 부처에서 추구하는 전략적 결과, 계획 및 기대효과, 3년간의 자원 활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성과측정과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보조금 및 기금 사업들은 5년을 주기로 재무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함
- 보고단계에서는 매년 모든 부처가 성과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의 지출 및 수입의 성과에 대한 검토보고서인 연간 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위원회는 회계보고서를 발표함
-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캐나다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서비스, 정책 등이 국민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범정부 성과보고서를 발표함

나. 성과DB 개요³⁸⁾

1) 재정법과의 관계(법제화 유무)

- 2012년 의회의 요구³⁹⁾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짐
- 2013년 4월 지출데이터베이스(Expenditure Database)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이름을 변경함

RECOMMENDATION 16:

- That the government develop a searchable online database that contains information on departmental spending by type of expense and by program.
- 정부가 비용 유형별·프로그램별 부서 지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자료: STRENGTHENING PARLIAMENTARY SCRUTINY OF ESTIMATES AND SUPPLY(2012)

38) GC InfoBase(<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about>, 검색일자: 2022. 10. 24) 참고
 39) <https://www.ourcommons.ca/DocumentViewer/en/41-1/OGGO/report-7/page-144>

2) 기존 성과관리 제도와의 연계, 관계

- Public Accounts, Estimates, Departmental Plans, Departmental Results Reports 등과 같은 정부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5년간의 최신 각 부처의 지출 및 성과 데이터 등을 모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Departmental Plans(Reports on Plans and Priorities, RPP):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계획을 제공하며, 3개년의 부처별 우선순위, 결과 및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함
- Departmental Results Reports, DRR: 각 부처의 계획, 우선순위 및 결과 등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보고서

3) 제공 내용(contents)

- GC InfoBase는 6개 지표로 나누어 설명하며, 표·그래프 등으로 사용자가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음
- 6개의 지표는 재정, 코로나19, 인력(공무원) 정보, 서비스 정보, 결과,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구성은 아래 <표 2>와 같음
-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GC InfoBase의 사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

4) 업데이트 주기

- 재정, 인력 정보 및 결과 데이터의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된 후, 업데이트가 진행되며, 데이터의 업데이트 주기는 각 데이터의 특성상 일정하지 않음
- 각 보고서들이 발행이 되면, GC InfoBase의 형식으로 수정한 후, 업데이트가 진행됨
- 데이터 수정은 필요한 경우에 진행함

〈표 2〉 GC InfoBase 제공 내용

재정 (Finances)	코로나19 (Covid-19)	인력(공무원) 정보 (People)	서비스 정보 (Services)	결과 (Results)	데이터베이스 (Datasets)
지출 및 고용 동향	코로나19 대응 소개	총연방 공무원 인구	서비스 소개	결과 소개	주제별 상세 보고서 제공
정부당국, 지출 계획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지출 규모	지역별 공무원 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부처별 결과 보고서 요약	
주요 추정치	코로나19 조치에 따른 예상 지출 규 모	공무원 유형	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여부	지표별 결과	
투표 및 법적 분할 지출		공무원 연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비율(전화, 우편, 온라인 등)	세부 결과	
지출별 항목에 대한 세부 정보		직급 유형 비율	서비스의 표준 성과		
부처별 지출에 대한 세부 정보		사용하는 언어의 비율			
정부의 지출 항목		직원 성별			
이전 지출					
인건비					

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financia>(검색
일자: 2022.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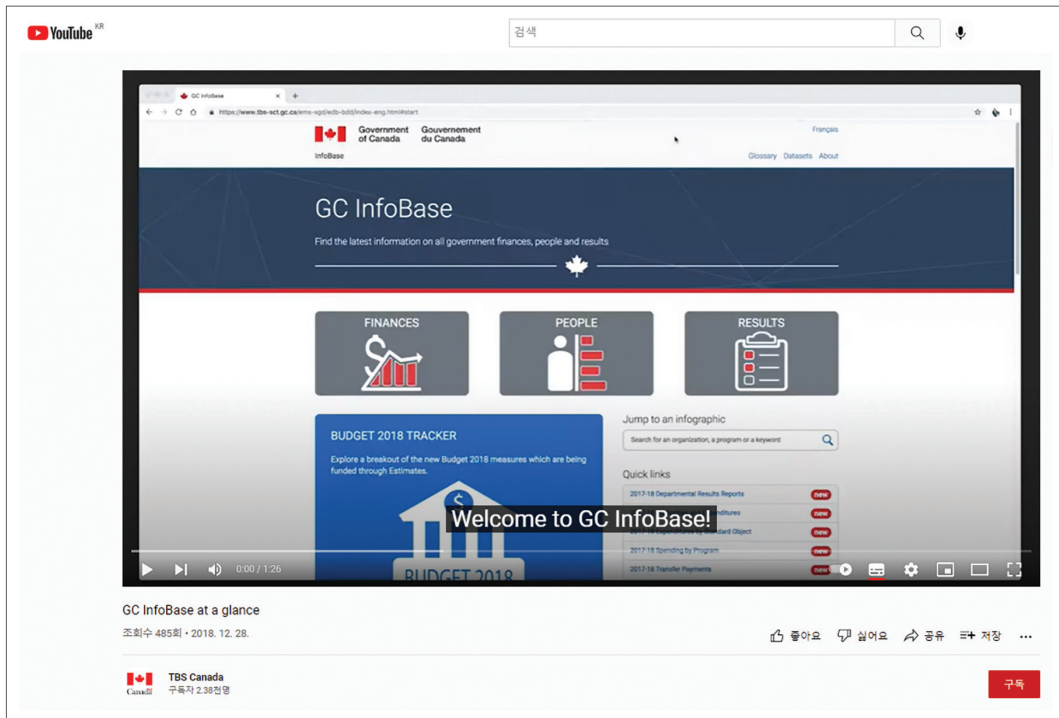
[그림 1] 성과DB 결과부문 전체 내용

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financia>(검색 일자: 2022. 10. 24)

[그림 2] GC InfoBase 부처별 결과 보고서 요약 및 부처별 세부 결과

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infographic/gov/gov/results>(검색 일자: 2022. 10. 24)

[그림 3] GC InfoBase 사용방법



자료: TBS Canada, <https://www.youtube.com/watch?v=WG1ngAI49Bw>(검색일자: 2022. 10. 28.)

5) 운영 방식(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및 역할을 중심으로)

1. GC InfoBase 원칙

① 일관적

- 다양한 공개 보고서들을 일관적인 체계로 정리하여 접근성을 쉽게 하고, 분석이 용이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음

② 목표 및 데이터 중심적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하여 제공함

③ 명확성·포괄적

- 정부 재정, 인력 및 결과 데이터를 포괄적인 부문과 자세한 내용 설명 부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복잡한 정보와 개념을 단순화하여 제공함

④ 편리성

- 사용자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노력함

2. 연방 조직 및 이해 관계

- 운영기관: 재무위원회 비서실(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TBS)
- 담당부서: 재무위원회 비서실의 지출분석팀(Expenditure Analysis team, Expenditure Management Sector of the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표 3〉 재무위원회 비서실 지출분석팀(Expenditure Analysis team) 조직도

이름	직함	전화번호 및 이메일
Andreas Loizou	Advisor/Economist	613-297-8114
Angel Leung	Analyst	613-324-8930
Christopher Dionne	Data Scientist	343-549-1047
Julia Bradley	Analyst	613-790-5387
Mike Muirhead	Senior Advisor	613-220-2138
Shane Tompkins	A/Director	613-218-3109
Stéphane Rancourt	Analyst	343-549-9207
Stephen O'Neil	Data Scientist	613-302-2310
Thomas L'Anglais(2022)	Data Scientist	
Cedric Manny Descombes	Claims officer	CedricManny.Descombes@tbs-sct.gc.ca

* 재무위원회 비서실의 지출팀은 정책분석가, 경제학자, 데이터 분석 및 웹 개발자로 이루어져 있음

** 이메일은 홈페이지에 제공되어있지 않으며, claims officer의 이메일이 기재되어있음

자료: 캐나다 직원 조직도(<http://www.goc411.ca/en/Employees/IndexByUnit/c%3dca%2co%3dgc%2cou%3dTBS-SCT%2cou%3dEMS-SGD%2cou%3dEACPDEDO-DADPRBDE%2cou%3dEACPDEA-DADPRAD>, 검색일자: 2022. 10. 28)

- GC InfoBase는 다양한 범주별로 그룹화 할 수 있는 연방 조직 및 이해관계의 포괄적인 목록을 제공함
- 캐나다의 연방정부조직은 정부 부처(Ministerial departments), 부처기관(Departmental agencies), 의회기관(Agents of Parliament), 부처기업(Departmental corporations), 서비스기관(Service Agencies), 공기업(Parent Crown corporations)으로 분류되며, 재정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 FAA)의 적용을 받음. 각 기관이 적용받는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정부 부처(Ministerial departments) FAA, Schedule I
- 부처기관(Departmental agencies) FAA, Schedule I.1
- 부처기업(Departmental corporations) FAA, Schedule II
- 공기업(Parent Crown corporations) FAA, Schedule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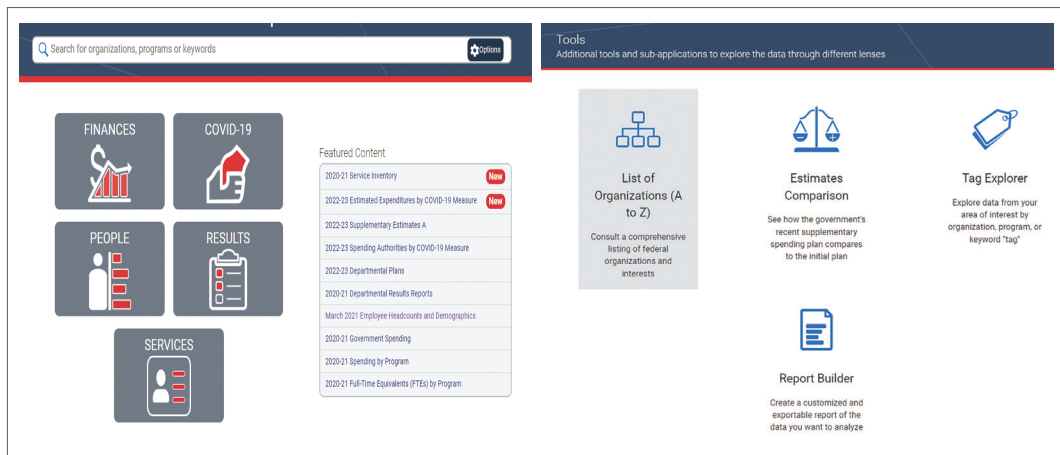
〈표 4〉 부처 목록

부처 목록
정부 부처 Ministerial departments
부처 기관 Departmental agencies
의회 기관 Agents of Parliament
부처 기업 Departmental corporations
서비스 기관 Service agencies
공기업 Crown corporations
공공기관 Agent Crown corporations
공기업의 자회사 Subsidiaries of Crown corporations
특별운영기관 Special operating agencies
의회 단체 Parliamentary entities
영리단체 Interests
혼합기업 Mixed enterprises
공동 기업 Joint enterprises
국제 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s
공유 거버넌스 기업 Shared-governance corporations
파산 및 파산법 조항에 따라 보유된 법인 Corporations held under the terms of the Bankruptcy and Insolvency Act

자료: Government of Canada, Overview of federal organizations and interests,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reporting-government-spending/inventory-government-organizations/overview-institutional-forms-definitions.html>(검색일자: 2022. 10. 24)

5) 사이트맵

[그림 4] 사이트 현황



자료: GC InfoBase,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start>(검색일자: 2022. 10. 24)

6) 사례

- 각 부처의 계획 보고서를 설명 할 때, GC InfoBase를 참고할 수 있도록 사이트의 주소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5] GC InfoBase 활용 사례

Financial,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for Global Affairs Canada's Program Inventory is available in the [GC InfoBase](#) .

Planned budgetary financial resources for International Advocacy and Diplomacy

2020-21 budgetary spending (as indicated in Main Estimates)	2020-21 planned spending	2021-22 planned spending	2022-23 planned spending
896,219,038	896,219,038	892,972,499	891,619,970

Financial,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for Global Affairs Canada's Program Inventory is available in the [GC InfoBase](#) .

Planned human resources for International Advocacy and Diplomacy

2020-21 planned full-time equivalents	2021-22 planned full-time equivalents	2022-23 planned full-time equivalents
2,408	2,384	2,376

Financial, human resource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for Global Affairs Canada's Program Inventory is available in the [GC InfoBase](#) .

자료: Global Affairs Canada, 2020-21 Departmental Plan https://www.international.gc.ca/gac-amc/publications/plans/dp-pm/dp-pm_2021.aspx?lang=eng(검색일자: 2022. 10. 24)

* 문의사항: gcinfobasefeedback-infobasedugcretroaction@tbs-sct.gc.ca

참고자료

공동성 외, 「성과관리 외국제도편」, 대영문화사, 2013.

노영래, 「공공부문 성과관리체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기획재정부, 2019.

박정수, 「재정성과관리제도 해외 동향과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20. (한국재정정보원블로그, <https://blog.naver.com/kpfisnet/221907863239>, 검색일자: 2022. 10. 28)

원종학 외, 「주요국의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2018.

이광희, 「자체평가 기관대표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9.

Government of Canada,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2015, <https://www.canada.ca/en/treasury-board-secretariat/services/planned-government-spending/expenditure-management-system.html>, 검색일자: 2022. 10. 24.

Management Accountability Framework, 2022, <https://www.canada.ca/en/treasury>

-board-secretariat/services/management-accountability-framework.html, 검색
일자: 2022. 10. 24.

Parliament Of Canada, Strengthening Parliamentary Scrutiny Of Estimates And
Supply, 2012.

GC InfoBase, 2022, [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https://www.tbs-sct.canada.ca/ems-sgd/edb-bdd/index-eng.html#about)
#about, 검색일자: 2022. 10. 24.

◆ 편집

장우현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편집총괄)
임소영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실무총괄)
강경민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변이슬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전예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아름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은솔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응준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이형석 재정성과평가센터 연구원

KIPF 재정성과평가 동향과 이슈

| 2022년 겨울(Vol. 9 No. 4) |

2022년 12월 27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표), <http://www.kipf.re.kr>
등 록 세종, 바00027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ISSN 2635-7127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